

한글
한글

생협평론 2015 여름(19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iCOOP 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공정경 김기태 김대훈 김현대 김활신 이대중
편집위원장	박종현
편집간사	신효진
편집디자인	김우식(꿈꾸는마을)
펴낸날	2015년 6월 20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4호
전 화	02)2060-1373/4
구 독	1권 3,0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협평론 2015 여름(19호)

길잡이

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박종현 (편집위원장)

4

특집 청년과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10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25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32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41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이영룡(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좌담회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김진희, 임소라, 조한솔, 김지만	58

이슈

크라우드펀딩법이란 무엇인가? :	이대중(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과장)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제로로 아이들을 제제로 지키자	공정경(아이쿱 시민기자)	89

돌발논문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을 위한 충분조건들 :	신성식(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CEO)	97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전제		

르포

노동자협동조합 설립과 두 개의 시각 :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	송문강(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107
--	---------------------	-----

아이쿱생협 만평

박해성(만화가)	121
----------	-----

기획 연재 / 클린광산협동조합

폐업 위기에서 함께 살길을 찾다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122
-------------------	------------------	-----

서평

개인인가, 관계인가?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홍훈(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33
----------------------------------	-------------------	-----

협동조합 소식

청년들을 위한 협동조합의 국제적인 노력 증가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7
--------------------------	------------------------	-----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42

발간도서

160

협동조합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박종현(편집위원장)

한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높은 연봉과 평생 직장을 약속하는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 공백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급여도 현저하게 낮은 조악한 일자리로 채워진다. 좋은 일자리를 운 좋게 확보한 ‘성 안의 사람들’은 자리를 빼앗길까 불안에 떨고,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턱 없이 낮은 월급밖에 받지 못하는 ‘성 밖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간다. 성(城)의 안과 밖을 가르는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지며, 서로에 대한 신뢰나 연대의 정신도 쇠락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성 밖의 사람들이 낮은 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들의 몫을 늘리려면 누구의 몫을 어떻게 떼어내서 어떤 방식으로 나눠야 할지 등을 놓고 많은 논의들이 펼쳐지고 있다. 극소수가 입법이나 행정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머지 99%의 몫을 부당하게 가져간 게 문제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상위 1%에 분노하는 상위 20%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부자증세,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유연안정성 강화, 소득주도 성장전략과 같은 대책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현실 진단이나 해법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들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에 한계가 있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세계화나 기술진보로 인해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기존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제의 핵심이 생산성의 상승으로 인해 모든 이에게 일을 줄 수 없다는 데 있다면, 그 해법은 전통적인 기업에서 생산이 잘되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가치가 인정받는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더 많은 노동이 활용되도록 자원배분 원리를 다시 설정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이때 새롭게 주목해야 할 영역은 보육, 간병, 요양, 돌봄, 청소, 교육과 같이 공급자와 이용자가 직접 접촉하고 그 관계의 질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 서비스 분야이다. 이러한 일은 협동조합과 같이 이용자와 공급자가 같은 조합원이거나 사람들 사이의 의미 있는 인간적 관계를 중시하거나 자발적 배품의 내재적 동기가 충만한 사업체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노동을 사회 서비스의 영역으로 돌리고 이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실험의 주체를 ‘청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청년은 우리 사회에서 성 안으로의 진입이 봉쇄된 대표적인 집단이다. 청년은 또한 어떠한 기득권도 지니지 못했기에 새로운 실험에 기꺼이 나설 동기가 가장 강한 연령층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이번 호의 특집을 ‘청년과 협동조합’으로 마련하였다. 청년들이 협동조합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지, 협동조합이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거처가 되고 있는지 등을 독자와 함께 확인해 볼 것이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의 글은 협동조합과 청년이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 많은 생각거리를 준다. 그에 따르면, 일에 대한 욕구와 능력은 평준화되었음에도 보상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 운영의 새로운 원리가 필요하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것이 경쟁보다 협동을, 소유권보다는 이용권을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이다. ‘오너십 사회’에 대비한 ‘멤버십 사회’라는 개념도 흥미롭다. 이수연 서울

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을 검토한 가운데, 청년의 고용 확대 뿐 아니라 능력 개발, 주거 안정, 부채 경감, 생활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은 청년에게 더 다가서려는 해외 협동조합들의 동향을 소개하고, 해피브릿지, 아이쿱생협, 한살림, 행복중심생협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들이 청년들을 돕기 위해 벌이는 노력들도 상세히 검토한다.

한편, 이번 특집에서는 협동조합 활동을 실제로 벌이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데도 공을 들였다. 젊은 신진 연구자인 명수민과 이영룡은 사회적경제 영역에 참여한 청년들이 어떤 삶과 노동을 원하며, 노동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고한다. 특집의 마지막 꼭지인 좌담회에서는 현장에서 협동조합으로 삶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김진희, 동네방네 협동조합의 조한솔, 민달팽이 협동조합의 임소라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삶의 터전으로 왜 선택했는지, 월급에 대한 기대치는 어떠한지, 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지 등을 진솔하게 들려준다.

이번 호의 이슈는 따분해 보이는 법률의 문제를 다뤘다. 평소에는 우리의 관심 밖에 놓여 있지만, 주권자인 시민들의 일반의지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한 게 법률이기에 협동조합 구성원들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대중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과장은 수많은 대중들이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 아이템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자금조달 모델인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 현황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공정경 아이쿱 시민기자는 2년 전 의안검토까지 진행된 후 입법화가 중단된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검토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급식 식품비를 부담하고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한 이 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면 의무급식의 사회적 합의가 그렇게 쉽게 뒤집혀지지는 않았을 게다.

한편, 이번 호에는 다소 논쟁적인 글들도 실려 있다. 신성식 아이쿱사업연합회 경영대표의 돌발논문은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답게 만드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업과 조직의 혁신에 주력하고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충돌하지 않으며, 오늘날 협동조합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조합원을 실제 주권자로 만드는 일이라는 주장은 협동조합들 사이의 협동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문강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는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해고사태가 일어난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협동조합과 노동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난제를 검토하고 있다.

김은남 시사인 기자의 이번 호 기획연재는 폐업 위기에 놓였던 쓰레기수거 사업체가 협동조합을 설립해 기사회생한 클린광산협동조합의 성공담을 입체적으로 들려준다. 협동조합 관련 신간 서적 중 가장 눈에 띄었던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을 다룬 홍훈 연세대 교수의 서평, 청년들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활동의 최근 해외동향을 정리해준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이주희 팀원의 글, 박해성 작가의 만평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인간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그 호의를 다시 되돌려 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그 행복감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양질의 인간관계는 수익성을 앞장세우는 기존 기업체에 비해 조합원들 사이의 인격적 만남을 중시하는 협동조합에서 충족될 가능성이 더 높다. 협동조합은 공급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소비자와 만나는가에 따라 성과의 질도 크게 달라지는 여러 영역들에서 특히 유효할 수 있다. 협동조합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꿔본다. [icoop](#)

청년 협동조합

특집 청년과 협동조합

-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좌담회

-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청년’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은 이중적이다.

첫 번째 시선은 ‘동정’이다. 세대 전체를 불쌍한 시대를 맞아 고통 받는 사람들로 규정하는 시선이다.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삼포 세대’론은 이런 시선을 대표한다. 이 세대가 받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반영한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이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두 번째 시선은 ‘희망’이다. ‘청년이 일어서야 나라가 일어난다’류의 눈길이다. 노인 창업과 40~50대 창업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청년 창업은 늘 정부와 사회의 주목을 받는다. 40대 위원회도 50대 위원회도 없지만, 청년위원회가 정부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 두 가지 시선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 점에서 만난다. 청년 바깥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점이다.

청년 동정론은 청년을 ‘억압받는 사람들’로 본다. 미안하고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청년 희망론은 청년을 ‘새로운 노동력’으로 본다. 더 많은 생산을 해내며 사회를 도와줄 기대주로 인식한다. 둘 다 ‘청년’과 ‘청년 아닌 사람들’로 사회를 나누고 ‘청년 아닌 사람들’의 시선으로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실은 청년의 문제를 ‘청년문제’로 인식해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그들을 ‘불쌍한 사람들’로 정의하든, ‘희망의 슈퍼맨’으로 인식하든 모두 환상일 뿐이다. 한국 사회가 불쌍한 청년의 문제를 다루자는 관점으로 봐서는 문제가 안 풀린다. 이들을 기존 체제가 작동하는 데 기여하도록 억지로 유도해

서도 안 된다.

문제를 풀려면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맞는 새로운 질서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관점에서 다뤄야 문제가 풀린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국 사회 특성과 청년 세대가 잘 맞을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변화의 방향을 잡고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감안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질서는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원리와 잘 맞는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 질서가 이어진다면 큰 파열음이 날 수 있다. 어쩌면 협동조합의 원리를 잘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큰 파열음이 생길지 모른다. 한국 사회는 기로에 서 있다. 그 이유를 이 글에서 짚어보려 한다.

피케티 신드롬

『21세기 자본(*Le Capital au XXI^e siècle*)』을 써서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세습자본주의’라는 화두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진행되다가는 자본 소유의 집중도가 점점 더 높아져서 ‘세습자본주의’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다.

이 이야기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오랜 믿음을 깨뜨린다. 조세제도 등 국가의 대대적인 개입 없이는 자본주의가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니 말이다.

그가 쓴 『21세기 자본』은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대중들의 폭발적 반응과 더불어 세계적 경제 전문가들이 앞다퉈 이 책

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판적 평론을 내놓으면서 관심과 열기를 더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주요 경제 학자들이 연이어 이 책을 칭찬하면서 열풍이 일자, 그레고리 맨큐 등 보수적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책에서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이렇게 관심이 뜨거울까? 요지는 명쾌하다. 피케티는 자본주의가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케인즈가 당시 주류이던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펼친 것과 비슷하게, 과거 성장과 분배 사이의 관계를 먼저 밝혀 정설로 알려진 사이먼 쿠즈네츠의 역U자형 곡선 이론을 반박하면서 논지를 펼친다. 쿠즈네츠는 산업화 초기에는 불평등이 커지지만 성장과 함께 다시 작아진다는 논리를 펼쳤다.

피케티에 따르면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전쟁과 급진적 분배 정책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불평등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후 불평등은 다시 커진다. 쿠즈네츠는 전쟁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사실 장기적으로 불평등은 끊임없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논지를 펼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방대한 부와 소득 분배 데이터를 주로 과세 자료를 통해 수집해 분석했다. 15년에 걸쳐 이 작업을 진행했다.

피케티 저작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소득이 아니라 ‘자본(부)’으로부터 분석을 시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단순히 분배 자체가 아니라 분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배력의 변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일반 법칙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본 소유의 장기 분포를 보면, 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00~1910년 유럽 각국의 자본 소유는 극도로 집중되어 있었는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을 거치면서 반전이 일어나 1970년대까지는 불평등도가 완화된다. 전쟁과 공황 탓에 불가피하게 정부에 힘이 몰리고 이를 토대로 높은 세율과 누진세제가 도입되면서 양상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현대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기였던 프랑스의 ‘벨 에포크 시대’ 또는 미국의 ‘도금시대’로 귀환하기 시작했다. 벨 에포크 시대와 도금시대는 불평등이 극에 달했을 때인데, 여러 수치로 볼 때 1980년대 이후 분석 대상 국가들이 그 시기의 불평등도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 미국 등 선진 각국은 사상 최고 수준의 부의 불평등 상태에 처해 있다.

노동과 달리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은 이를 보유한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득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자본을 소유한 부자들이 더 많이 저축하면서 자본은 더 크게 늘어나며 불평등이 세습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피케티는 자본수익률(r)과 경제성장률(g) 사이의 관계에 따라 불평등도가 달라지며, $r > g$ 인 상태에서는 자본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며 불평등이 심화하게 된다는 이론을 세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수익률은 4~5% 수준에서 유지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경제성장률이 이를 현저히 밀돌고 있다. 따라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며 불평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본소득의 비중도 더욱 높아지면서 세습자본주의 시대가 개막되리라는 게 피케티의 생각이다.

자본소득이 커지면 자본 소유자들은 높은 저축 성향을 보이며 이를 다시 저축하여 더 키우게 된다. 이런 자본이 상속되면서 후세대는 자본을 물려받아야만 경쟁할 수 있는 세습자본주의 시대에 살게 된다. 결국 능력과 노력을 통해 시장의 승자를 가린다는 자본주의의 약속은 형편없이 깨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자본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겨 자본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자본소득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불평등이 완화된다. 따라서 피케티는 글로벌 공조를 통해 자본과세를 도입하면

서 강력한 누진세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피케티의 통계와 이론에 대해서는 반박도 많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 사회와 세습자본주의

한국에서도 피케티의 책은 2014년 9월 출판되자마자 시중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이 비평을 내놓으면서 열기가 번졌다. 특히 한국 사회는 ‘세습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소비할 만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다. 자산 배분이 상대적으로 평등하던 사회에서 급격하게 불평등한 상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해방 이후 토지개혁으로 자산 분배가 상대적으로 평등해졌다. 다들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해 경쟁했던 셈이다. 그러던 한국 사회에 최근 본격적으로 ‘상속을 통한 자산 형성’이 시작되고 있다. 재벌 기업들은 2세를 거쳐 3세, 4세로 경영권을 본격적으로 물려주고 있다. 1950년대 중반~1960년대 중반에 태어나 1980~1990년대 호황을 거치며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고 불렀던 베이비붐 세대 중 고소득자들도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상속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받을 기업이나 자산이 없는 계층의 박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상속 없이는 계층상승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확산된다.

그럴 만도 하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서고 중소기업이 무너지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졌다. 사교육비가 늘어나 재산이 없는 계층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주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니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피케티 열풍’은 이유 있는 열풍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불평등 자체도 문제지만 ‘세습자본주의’가 굳어져

젊은 세대가 상속 이외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불평등의 완화 자체보다는 불평등 완화를 통한 ‘기회의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습자본주의’는 ‘자본이 없는 사람은 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체제’라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피케티의 논리가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초점이 맞지 않는 비판이다.

피케티가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를 우려하는 이유는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능력주의(meritocracy)’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흐름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능력 있는 개인이 기회를 얻어 성공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약속이 깨어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다. 어찌 보면 피케티가 해결하려는 문제도 불평등 그 자체는 아니며, ‘세습자본주의를 구축해 시장 진입의 기회를 막을 정도로 심각해진 불평등’이다.

한국 사회에서 피케티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는 맥락도 비슷하다. 1955~1963년 출생자들을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이 이제 막 60대로 진입하고 있다. 자식들은 이제 사회 초년병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970년대부터 대규모로 지어지기 시작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세대다. 이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모을 수 있던 이들이 그 아파트를 사고 자산을 불렸다. 이들이 그렇게 형성한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을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세습은 인구의 0.1%도 되지 않는 거액 자산가, 거대자본이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형성한 부를 세습하는 재벌의 3, 4세 세습과 다른 의미를 띤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 세대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나뉜다. 출발선이 달라진다.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시대를 맞는 것은 처음이다.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는 전혀 다른 질서를 지닌 사회에 살게 되

는 셈이다. ‘세습자본주의’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오너십 사회

한국에서 세습자본주의의 출발은 ‘내집마련’이라는 구호로부터 시작했다. 한국인의 인생의 목표는 자기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이 됐다. 사람은 집 한 채 마련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으로 나뉘진다. 정부도 은행도 집 가지려고 돈 빌리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다. 건설회사는 재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집을 짓고, 사람들은 빌린 돈으로 그 집을 사들이고 평생 갚아대면서 어른 노릇을 한다. 그게 한국 사회였다.

‘내집마련’이라는 구호는 미국 정치에서의 ‘오너십 사회(Ownership Society)’라는 구호와 통한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5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국내 정책의 키워드로 ‘오너십 사회’를 내세웠다. 오너십 사회는 ‘개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가진 것을 더 늘리는 사회’를 뜻한다. 한마디로 미국 국민들이 각자 집과 주식을 소유하면 미국에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논리다.

부시 대통령의 오너십 사회는 결국 대출 확대를 통한 주택보유율 증가로 이어졌고,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동으로 이어졌다. 이때 생긴 금융 위기로 미국인들의 주식자산의 가치도 떨어졌다. 오너십 사회의 꿈은 결국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오너십 사회는 자산 보유와 축적을 경제적 삶의 핵심 성과 지표로 삼는다는 데서 주요한 경제 패러다임을 구성한다. 1980년대 초부터 영미권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기업에서의 주주가치 지상주의도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 포괄된다. 그리고 그 원리를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현재는 ‘내집마련’과 ‘주주가치’라는 말로 대표되는 경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은 상태다.

실제로 1970~1990년대에 ‘내집마련’을 향해 달려가던 한국인들은, 2000년대 초반 ‘바이 코리아’ 열풍과 함께 주식투자, 펀드투자를 향해 더 내달렸다.

모든 사람이 자산보유자가 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 자산 목록에 집뿐 아니라 주식까지 추가된 것이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윤리의 코드가 심겨지고 자라났다. 어디서든 소유권을 가진 이들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정당하며, 그 소유권이란 신성한 것이라는 코드였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제쳐두고 ‘주주’에게만 귀속되어야 한다는 믿음도 거기서 맥락이 닿는다. 자영업자가 어떤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이 팔아도 결국 돈을 버는 것은 땅주인이라는 상식도 이 윤리와 만난다. ‘오너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암묵적 사회 운영 원리가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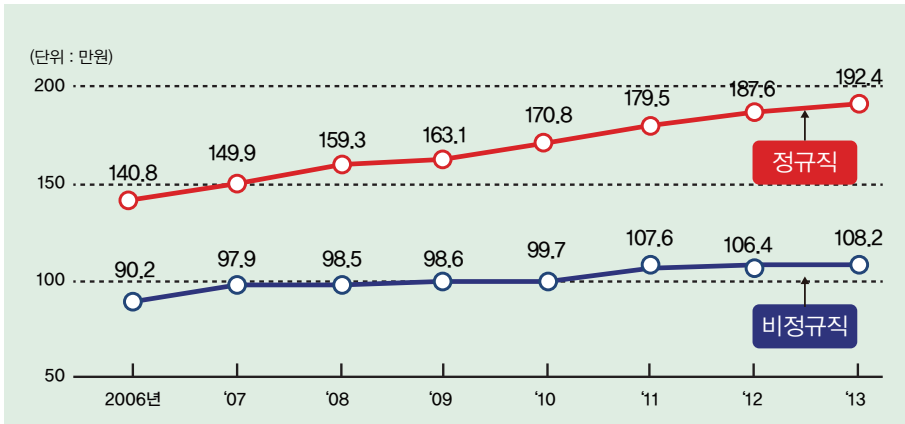
불평등의 시대

자산의 세습은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을 낳는다. 불평등을 그대로 세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세대에서 공평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세습된 불평등이 더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 세대에 능력을 발휘해 많은 소득을 얻은 이들이 자산을 새로 취득할 수 있다면 역전도 가능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면, 불평등이 세습되고 심화하는 ‘세습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설혹 당대에는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말이다.

불행히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 두 가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반대다. 2014년 기준으로 20대 청년 세대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2%이다. 문제는 임금 격차다. 2013년 29세 이하 정규직의 월 급여액은 평균 192만 4천 원이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108만 2천 원이었다. 출발부터 격차가 심각하다. 여기에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청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다 과거보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까지 하다. 2006년 정규직 월급은 140만 원, 비정규직은 90만 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170대 99로, 2013년에는 192대 108

로까지 벌어진 것이다. 7년 동안 정규직 월급은 37% 오른 반면, 비정규직 월급은 20% 올랐다.(그림 1)

〈그림1〉 29세 이하 근로자의 월 급여 변동 추이



자료 : 통계청

새로운 자산을 형성할 가능성도 낮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지금 청년 세대가 소득을 모아 아파트를 구매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 게다가 주택가격 상승 시기도 이미 지나가고 있다. 결정적으로 실질임금도 오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결국 자산을 형성하는 것도 불리는 것도 어려워진 것이다.

1991년 분양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우성아파트를 보자. 32평형 아파트 한 채 분양가격이 당시 5,166만 원이었다. 그런데 당시 2인 이상 가구 월 가처분 소득은 97만 원이었다. 즉 평균적 가정에서 4.4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그런데 2014년 현재 같은 아파트 가격은 5억 6,800만 원이다. 2인 이상 가구 월 가처분소득은 340만 원이다. 아파트를 사려면 이제 13.9년을 꼬박 모아야 한다. 1990년대 초반보다 세 배가 더 걸린다. 아파트가 23년이나 지난 낡은 집이 된 점은 감안하지 않고 계산해도 그렇다. 이런 구조에서는 애초 형성된 불평등 상태를 극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불평등

은 단지 심화할 뿐이다. 세습자본주의의 그늘이 더 짙게 드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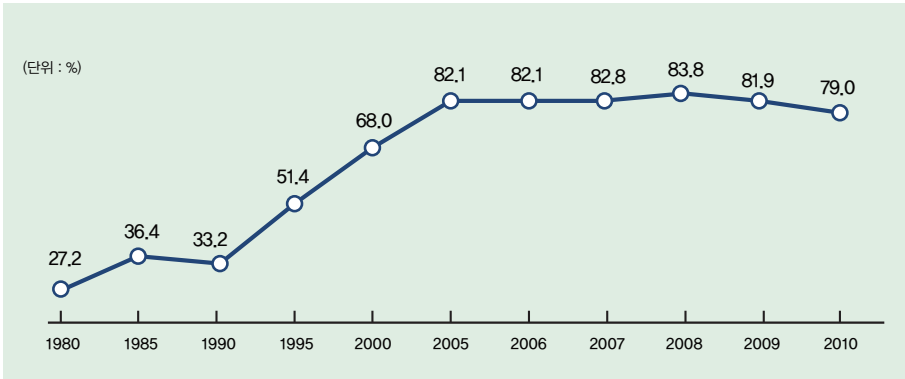
평등 친화적 세대와 증오 넘치는 사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사회가 좀 불평등해졌다고 치자. 그래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참아낼 수 있다면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불평등이 옳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불평등 탓에 사회가 무너진다는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 불행히도, 어쩌면 다행히도, 지금 청년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등 친화적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 불평등해진 세습자본주의 사회에 맞을 수 없는 세대다. 그들이 처한 객관적 조건 때문이다. 세대 내 지식과 문화 격차가 작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다. 세 가지 요소를 따져볼 수 있다.

첫째, 대학이다. 한 사회의 대학은 지식과 문화가 집적된 고등교육 기관이다. 이곳을 거쳐 간 이들은 비슷한 내용과 수준의 지식과 문화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태어난 이들은 대학 진학률이 20% 안팎에 지나지 않던 시대를 살았다.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는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그림 2) 모든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정도의 지식수준에 다다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대학 진학률 20% 시대에는 대학을 ‘특별히 우수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믿었다. 대학에 가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정당하다고 믿었다. 이런 사회에서는 불평등한 상황을 정당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세대는 대학 진학률 80% 시대에 살고 있다. 이들 모두 대졸자에 걸맞은 일을 하기를 원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다. 즉 일에 대한 욕구와 능력이 평준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불평등은 문제가 된다. 욕구와 능력은 다들 비슷한데 보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심화한다.

〈그림2〉 대학 진학률 변동 추이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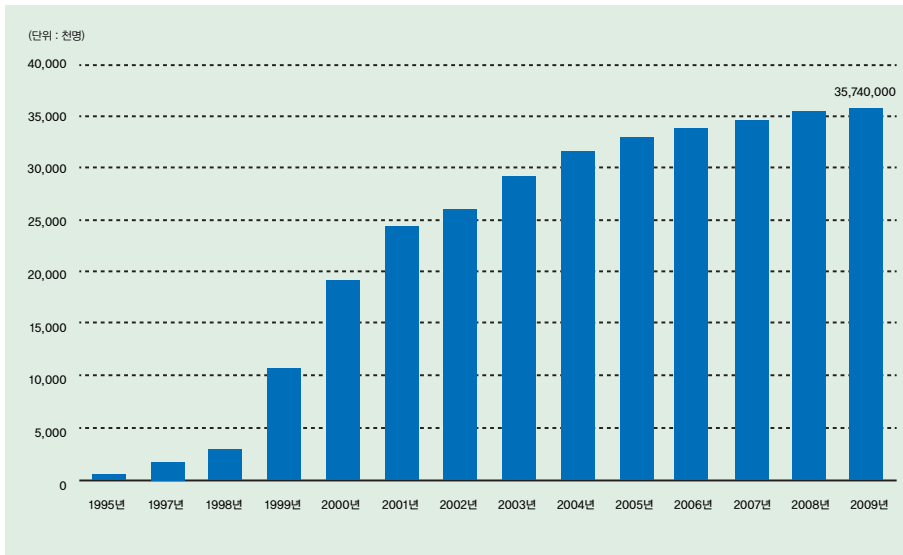
둘째, 신기술에 대한 노출이다. 신기술 사용 능력, 특히 한국에서 2000년 이후 일반화된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네트워크에 접속해 사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업무 능력이다. 신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비슷하다면 대체로 기본적 업무 능력이 비슷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기술에 대한 지식은 대학만큼이나 빠르게 평준화됐다.

1950년대 이전 출생자는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야 컴퓨터를 만지게 된 사람이 많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실에서 지식을 다루며 일하는 화이트컬러는 그나마 컴퓨터에 접점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1990년대 말 인터넷 붐 시기가 되어서야 컴퓨터와 인터넷을 접하게 된다. 특히 육체노동자들은 PC를 거의 접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넘어온 경우도 많다. 당연히 세대 내 격차가 크다. 1970년대 출생자들은 대학에 가서야 컴퓨터를 접한다. 하지만 대학에 가지 못한 이들은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인터넷은 더 늦었다. 대학 진학률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세대 내 격차가 역시 컸다.

그러나 1990년대 생을 떠올려보자.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 이용자이고, 특히 초고속인터넷이 다 보급된 상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그림 3) 스마트폰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2000년께 초고속인터넷이 본격적으

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은 2009년에 한국에 처음 상륙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 세대는 처음으로 인터넷 네이티브 세대이면서, 세대 내 기술 격차가 가장 적은 세대가 됐다. 이 세대는 사실상 누구든지 화이트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대가 됐다. 이전 세대와 매우 다른 특징이다.

〈그림3〉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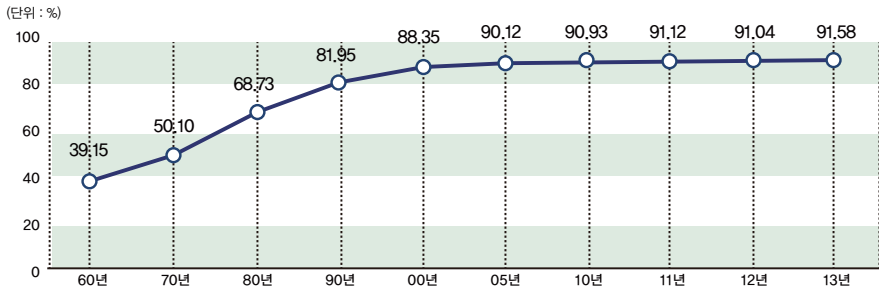
자료 : 한국 인터넷 진흥원(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셋째, 도시화다. 도시는 처음에 생산 방식의 변화와 함께 형성된다. 낮은 밀도의 주거가 중심이 될 수 있던 농어촌과 달리, 대공장 중심의 산업 재편은 많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고밀도 도시화로 이어진다. 농어촌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시 거주자들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정한 방식을 채택하며 도시 문화를 형성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생활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생겨난다.

한국의 도시 거주자 비율은 1960년대 39%에서 1980년대 68%, 1990년대 81%로 올랐고, 2005년 이후 90% 이상을 유지하며 계속 높아지고 있다.(그림

4) 1960년대 출생자는 절반 이상이 농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2000년대 출생자는 열 명 중 아홉 명이 도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즉 베이비붐 세대가 태생적으로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으로 나뉘어 있었던 반면, 새로운 세대는 모두가 ‘도시 사람’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을 갖게 됐다.

〈그림4〉 도시 거주자 비율 변화 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대학, 신기술, 도시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세대 내 지식 격차는 수십 년 사이에 극적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등 과거 세대가 문화적으로 불평등을 배포하고 있는 세대인 반면에, 새로운 세대는 문화적으로 매우 평등하고 동질적인 세대가 됐다. 문제는 보상의 불평등은 오히려 커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한국 사회의 소득 및 자산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지식 격차는 굉장히 컸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소득 및 자산 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지식 격차는 매우 크게 줄었다. 여기서 정당성의 문제가 생긴다. 능력과 문화는 동질적이 되었는데 보상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다면, 사람들은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해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이런 불평등한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배제와 차별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미 이런 현상이 수면 위

로 떠오르고 있다. 토마 피케티의 ‘세습자본주의’론이 큰 공감을 얻은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 등 불공정 담론을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이들도 받아들이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불평등 감수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 배제와 차별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한 대학 내에서 단과대학이나 캠퍼스 위치를 놓고 ‘성골, 진골, 6두품’을 나누는 현상이 그 중 하나다. ‘일베’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배출되는 혐오 발언도 따지고 보면 ‘균등한 능력과 불평등한 결과’라는 상충되는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배제와 차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미래는 아주 작은 부를 얻기 위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공정성에 예민해지고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떠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차이가 거의 없는 사람들끼리 차이를 보이기 위해 학벌이나 지역 등을 강조하는 흐름이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장치를 통해 증오를 내뿜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경로를 통해 증오가 넘치는 사회가 되는 게, 새로운 세대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역설적으로 그 이유는, 새로운 세대가 지식과 문화적 조건에 있어 가장 평등한 세대라는 데 있다.

멤버십 사회

가장 평등 친화적인 세대와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만났을 때 파열음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 파열음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게 새로운 사회의 운영 원리다. 전혀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진 세대가 나타나면, 전혀 다른 운영 원리를 가진 사회가 필요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원리다. 1인 1표로 의사결정을 하며, 경쟁보다 협동을, 소유권보다는 이용권을 강조하는 운영 원리다.

협동조합의 원리를 사회 운영 원리로 일반화한다면, ‘멤버십 사회’로 부를

수 있다. ‘오너십 사회’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오너십 사회’는 자산을 소유한 이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며,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벌이는 경쟁을 사회의 기본 동력으로 삼는다. ‘멤버십 사회’는 자산을 활용하는 이들이 평등하게 참여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며, 협력을 사회의 기본 동력으로 삼는다. 멤버들은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진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통한다.

한국 사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오너십 사회의 자리를 ‘멤버십 사회’의 원리로 대체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보유보다는 자산의 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즉 스톡(stock)보다는 플로우(flow)를 중심에 놓는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 제공자보다 노동 등의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 조직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조직이다. 그 원리를 경제 전체로 확장할 수 있겠다는 의미다.

사회적경제는 기존 경제 질서 아래서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다. 그런데 청년문제와 연결 지으면, 사회적경제의 운영 원리와 과정 자체가 사회 전체에 시사점을 줄 수도 있다. 소유가 아니라 이용에 초점을 둔 조직 원리, 이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중심에 둔 거버넌스 시스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가 모두 그렇다. 협동조합은 청년과 만나야 한다. 협동조합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청년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래의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렇다.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청년정책은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까? 일자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여성 뿐 아니라 청소년문제도 포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청년 중에는 학생이 많으니 교육부? 알쏭달쏭하다.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나온 게 2007년이니, 우리 사회에서 청년문제가 대두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의 지독한 취업난에 주목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취직을 못하는 거라는 답답한 훈계도 있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문제는 생활고로 이어졌다.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는 등록금, 스펙을 쌓기 위해 필요한 각종 취업 준비 비용, 학업과 취업을 위해 부모 곁을 떠나면서 겪게 되는 주거비 등이 청년의 현실을 말해주는 단어가 되었다. 단순 경제적 문제 외에도 진로를 결정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문제들도 존재한다. 이렇듯 청년문제는 종합적이다.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종합적인 청년정책 전담 부서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는 청년문제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다. 바로 청년정책담당관이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이다. 이와 함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도 제정되었다.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의 고용 확대뿐 아니라 능력 개발, 주거 안정, 부채 경감,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정책 참여 확대 등

을 위해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기존에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있는 청년정책을 생활 안정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니트¹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곧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청년들의 주거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서울의 청년이 겪는 문제는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주거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측면도 있고, 서울의 땅값과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탓도 있다.

서울에는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다. 서울 전체 1인 가구 비율이 2010년 기준 24.4%인 것에 비해 서울 청년(20~29세) 1인 가구 비율은 63.4%에 이른다. 서울에 사는 20대 청년 10명 중 6명은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혼자 사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좋을 리 없다. 서울 청년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10년 기준 30.6%이다. 주거빈곤율이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지하 및 옥상 거주,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곳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서울 중에서도 고시촌이 몰려 있는 관악구의 청년 가구 주거빈곤율은 51.3%에 달한다. 관악구 청년 중 절반은 ‘집이라고 볼 수 없는 집’에 살고 있다. 또한 청년 가구 중 절반이 월세로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다.² 매달 나가는 집세는 청년들의 생활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전

1 니트(NET)는 진학이나 취직도 하지 않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을 일컫는다. 즉, 일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태의 청년들을 뜻한다. 영국 정부가 1999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유래했다.

2 2010년 기준 20~34세 청년 가구의 월세 점유율은 52.5%이다. 최은영, 권순필(2011).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0)』, 통계개발원.

체 소득 중에 주거비로 나가는 돈이 30% 이상인 청년 가구는 69.9%에 달하며, 50% 이상인 경우도 22.7%에 달한다.³

이러한 현황을 통해 판단해보자면,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부담 가능한 양질의 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어떻게 하면 주거의 질이 좋으면서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집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민간 건설업이나 임대업에서 그 해답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신 서울시가 지난해와 올해 내놓은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청년 주거문제의 새로운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홍은동에 이어 화곡동에도

서대문구 홍은동에는 31명의 청년이 같이 또 따로 살고 있는 월세 13만 원 짜리 주택이 두 채 있다. 서울시가 만든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이며, 이곳의 입주자들은 ‘이웃기웃 청년 주거협동조합’(이하, 이웃기웃)의 조합원들이다.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자율적 관리’와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서울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임대주택이다. 기존 임대주택과의 차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에서 주택의 관리나 유지를 자율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홍은동 임대주택 외에도 육아공동체 중심의 강서구 가양동 임대주택과 예술인 공동체 대상의 중구 만리동 임대주택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웃기웃’은 서울시에 적을 둔 1인 가구 무주택 세대주 중 소득이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만 19~35세 청년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3 최은영 외(2014). 『사회적경제 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주거빈곤 개선 방안』. (사)한국도시연구소.

것이였기에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입주 후 활동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세대원을 정했다. 이후 입주가 확정된 조합원들이 모여서 스스로 정관도 정하고 이사장도 선출하며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마쳤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임대보증금은 1,924만 원, 임대료는 월 13만 6,500원에 불과하다. 입주 후에는 건물 운영 관리와 청소 및 수리 등도 조합원들이 직접 하고 있다. 이처럼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관리하면서 소소한 운영비와 관리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했다. 주택 1동 2층에는 공동 모임 공간인 ‘사랑방’이 있는데, 이곳에서 2주에 한 번 함께 요리하고 밥을 먹는 시간도 가진다. 혼자 지내던 이들에게 친구와 이웃이 생겼다.

어찌 보면 일반적인 임대주택 공급주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우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점과, 그래서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 했으며, 주거를 통해 청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홍은동에 이어 강서구 화곡동에도 청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협동조합,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서울시의 청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전부터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청년들의 활동이 있었다. ‘민달팽이 유니온’이 대표적인 단체이다. 이들은 직접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 주택 두 채를 운영하고 있다. 홍은동 임대주택이 공공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후원과 대출을 더해 자금을 마련하여 주택을 임차한 후 그것을 다시 조합원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계속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정성은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 입장에서든 마찬가지로 얻게 되는 장점이다. 청년들이 먼저 현실에서 지속적인

로 문제 제기를 하고 직접 대안을 만들어온 결과, 서울시에서도 청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을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었다.⁴

앞으로는 임대주택 제공 외에도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과 같이 자발적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주택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주택 임차를 위해 필요한 목돈 마련인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⁵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다. 청년 주택협동조합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활성화된다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실험과 성공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서울시 청년정책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문제 외에도 결국 청년문제의 대책은 청년들이 서로 도우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찾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다(사실 이는 청년뿐 아니라 모든 정책 대상에 적용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서로 돕고 스스로 자립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서 협동조합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특히 청년의 경우 기성세대보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문화에 친숙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친화적일 수 있다.

청년 금융 지원도 청년들의 협동조합으로부터

민달팽이 유니온 외에도 청년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청년 단체로 ‘청년 연대은행’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인데, 청년연대은행 역시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⁶ 청년연대은행은 청년들의 상호부조 조직이다. 조합원들은

4 이는 주택 분야에 있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주체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례는 ‘사회주택’을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자금·인력·택지 등을 보조 및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금융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다.

6 현재 법상으로는 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에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연대은행은 정식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지는 않았다.

출자금을 내고 일정 정도의 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나면 돈이 필요할 때 청년 연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청년연대은행이 창립을 준비하면서 2011년 15~34세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취업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약 122만 원에 불과했으며, 그중 48.5%가 평균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또한 최근 1년 사이 현금이 없어서 급하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30.9%에 달했다. 당장 급하게 20만 원, 100만 원이 필요한데 수중에 그 돈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청년연대은행의 목표이다. 금융 지원뿐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어주자는 것 또한 청년연대은행의 중요한 목표이다.

청년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청년층 신용 회복 및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연대은행과 같은 청년들의 금융 상호부조 조직이 활성화된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년연대은행의 경우 서울시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방동에 만든 ‘무중력지대’에 입주하고 있다.

청년이 서로 도우며 자립하게 하는 정책

협동조합은 수익이 아니라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돈은 많지 않지만 같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이들에게 가능성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협동조합의 특징이 적절히 들어맞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특히 협동조합의 성장은 정책 지원 대상들이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협동조합은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사회의 기여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보다 주택의 공공성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조합원들이 함께 관리하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주거의 성격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청년들이 갖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13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협동조합 대표를 연령대로 분류했을 때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했다.⁷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같은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달한다는 점을 비교하면 협동조합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 관련 연구에서 진행된 청년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⁸ 협동조합에 대한 강연이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가 16%, 관련 책이나 자료집을 본 적이 있는 경우는 17%였다. 아직 청년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나 청년연대은행과 같이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가려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성공을 확산시켜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갖는 청년이 늘어나고, 선도 주자들의 성공 사례가 하나둘 만들어진다면 협동조합이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coop**

7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50대로 38%를 차지했으며, 여기에 60대까지 더할 경우 52%로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었다.

8 2013년 '청년허브'의 청년 모임인 '청년 참'에서 20~30대 청년 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김병권 외 (2013).『청년 협동조합 생태계 지원 프레임워크』설계를 통한 서울시 지원체제 구축 방안 조사 연구 - 서울시 청년들의 협동조합 참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이 일다운 일, 삶의 질을 포함하는 평화로운 미래를 누릴 권리에 초점을 둔 목표를 채택한다. 경제적·기술적 수단과 사회연대경제포럼, 네트워크에 청년 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년 사회연대경제 계획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청년은 자신의 개인적·경제적·정치적 삶을 구축할 권리를 갖고 지원을 받는다.”

국제 사회연대경제 운동 및 네트워크가 지난해 ‘포스트 2015(Post-2015)’ 개발 의제에 대해 제출한 권고 보고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포스트 2015 개발 의제는 유엔이 2000년 수립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새로운 15년 청사진으로 내놓은 것이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권고 보고서에 청년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협동조합, 지속가능성 위해 청년과 소통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발간 자료를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청년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동조합에 관심 갖게 해 취업과 창업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CA의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¹』은 협동조합 운동의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들이 청년들을 이끄는 데 일조하고 있다.

1 2013년 1월, ICA에서 발간한 보고서(일명 2020 비전)로 협동조합의 경제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협동조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020 비전’은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리더로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델이 되는 것’, ‘사업의 여러 형태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편집자 주)

나라마다 협동조합이 청년들과 소통하는 형태는 다양하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꾸리기도 하고 협동조합연합회가 정부와 함께 청년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한다. 예컨대 일본의 대학생협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꾸리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생이 도쿄 대학생협의 국제협동조합교육 여름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해, 일본생협연합회에서 교육을 받은 후 와세다대와 게이오대 등 다른 대학생협에서도 활동을 경험한다. SOK는 핀란드에서 조합원 수 190만 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협동조합이다. 에스그룹(S Group)이라고도 불리는 SOK는 슈퍼마켓, 주유소, 호텔, 레스토랑, 자동차 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했다.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교육은 물론 매장 전학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 운영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정부와 손잡고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협력 체계는 한 해 전인 2012년 레가코프와 연계한 협동조합들의 청년 네트워크인 제네라지오니가 경제발전부의 대표자들과 면담하면서 시작됐다. 제네라지오니는 청년들이 협동조합기업을 설립하려 할 때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풀어보고자 정부와 대화를 꾸준히 하고 있다. 협동조합 부문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스테파노 자마니 이탈리아 볼로냐대 교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고용문제 해법의 하나로 협동조합을 주목했다. 2013년 서울을 방문했을 때 자마니 교수는 “협동조합이 청년 실업문제의 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CA와 ILO, 청년 고용 촉진 위해 파트너십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오래전부터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두 국제기구는 청년 실업을 완화하는 데 협동조합이 기여한다는 인식을 함께해왔다. 국제노동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개발훈련 프로그램에 협동조합 교육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글로벌 금융위

기 시대에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기업을 노동자협동조합이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국제노동기구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은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과 강화를 위한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에는 협동조합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생각이 일찍부터 있어왔다. 1919년 창설된 국제노동기구는 1920년에 협동조합국을 설치했다. 초대 사무총장인 알베르 토마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중앙위원을 역임한 프랑스의 협동조합인이었다.

청년 협동조합인들이 협동조합이 청년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2년 11월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폐막식에서 발표된 UN 세계협동조합 청년성명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 세계 젊은 협동조합인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성명서는 협동조합이 얼마나 청년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을 고용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성명서는 2012년 이후의 UN 협동조합 개발실행계획 마련과 정책 대화에 활용되고 있다. 성명서에는 “청년들은 실업, 불완전한 고용, 권한 강탈, 참여 배제와 같은 문제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왔으며,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청년들을 최대한 경제, 사회 시민 참여로 전환을 위한 실행 가능하고 훌륭한 방식의 하나로써 협동조합 참여를 강력하게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협동조합이 청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자협동조합, 일자리 넘어 희망을

협동조합의 메카이자 노동자협동조합인 몬드라곤협동조합(MCC) 역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만들어졌다. MCC는 1941년 호세 마리아 아리스 멘디아리에타 신부가 쇠락한 광산 도시 몬드라곤에 부임하면서 태동했다. 가

난한 소도시였던 몬드라곤은 스페인 내전을 겪으며 기반이 무너진 상태였다.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는 지역을 복원하려고 직업학교를 세웠다. 교육받은 청년들이 대거 배출됐으나 정작 일자리를 구한 청년은 거의 없었다. 스페인 내전으로 몬드라곤의 모든 산업 기반이 붕괴됐던 것. 그나마 취직을 하더라도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노동의 보람’을 느끼는 젊은이는 거의 없었다. 호세 신부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제3의 방식으로 생산협동조합에 착안했다. 그가 이후 자신들의 제자와 지역주민들의 성금을 모아 설립한 첫 생산협동조합이 바로 MCC의 모태인 석유난로 공장 ‘울고(ULGOR)’였다. 그는 끊임 없는 토론을 통해 노동자협동조합의 전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2013년 한국에도 대표적인 노동자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면국수 프랜차이즈 1위 업체인 해피브릿지가 14년간의 주식회사 간판을 내리고 노동자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해피브릿지는 주특기인 외식사업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이란 사회적 가치를 연계했다. 지난해 론칭한 햄버거 브랜드 ‘더 파이버’가 그런 모델이다. 대기업의 일회적인 자금 지원이 아니라 실제 함께 사업을 해나가는 방식이다. 해피브릿지의 요리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더 파이버 매장에서 3년간 투입되어 일하게 되며, 3년이 지나면 점포 초기 투자비용의 3분의 1 비용으로 인수할 권리를 얻게 된다. 인수의 조건은 5명이 협동조합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다.

최근에 해피브릿지는 점포 셰어링(sharing) 방식의 점심 뷔페 소자본 창업 전수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음식점 매출은 주는데 임대료는 계속 올라 가게 주인의 부담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업외 시간에 점포를 재임대하는 방식의 점포 나누기 실험들이 생겨나고 있다. 해피브릿지도 생계형 창업이 필요한 청년들과 함께 점심 뷔페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점포 셰어링은 세금 등 제도적 걸림돌을 풀어가야 한다. 이런 난제 속에서도 해피브릿지는 청년 창업에 유용한 모델을 만들어 운용하면서, 단순히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희망을 주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생협, 협동의 경제 경험할 기회 제공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전 개별법 근거로 활동해왔던 협동조합들은 청년에게 협동의 경제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대표적으로 아이쿱, 한살림 등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은 청년인턴 프로그램이나 청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의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생협운동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가진 청년들을 찾아 키우고 생협을 알리고 이 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매해 겨울방학에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사전 교육과 생산지 체험도 들어간다.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은 생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경험하기도 한다. 한살림은 청년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꾸려오고 있다. 청년살림학교를 열어 협동운동, 먹을거리, 농업과 농촌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협동하는 삶의 방식을 함께 찾아본다. 지난해에는 연구기관인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한살림과 청년 세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청춘의 밥과 삶, 안녕하십니까?」라는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학이 협동조합대학원을 만들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지원하기도 한다. 아이쿱은 2010년 성공회대 일반대학원에 협동조합경영학과를 만들기로 협약을 맺고,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아이쿱은 장학금 지원을 2019년까지 연장해 다시 6억 원의 장학금을 추가 지원한다. 한신대와는 2013년 설립된 사회혁신경영대학원에 2018년까지 총 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아이쿱이 이들 두 대학과 협약을 맺어 협동조합 관련 학과를 만들면서 청년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 협동조합 창업 청년을 자문하거나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례도 있다. 아이쿱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청년을 비롯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려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경우에 따라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한다. 행복중심생협은

협동복지기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삶에 밀착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을 지원한다. 협동복지기금은 조합원과 생산자 600여 명이 2010년부터 모금해 조성된 것이다. 협동복지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기금을 조성하고, 청년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생활 속 불편함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협동복지시스템’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이다.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지역 여건 개선 실험

최근에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일자리와 문화, 의료 시설 등 여건을 만든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한살림은 지난해 안성물류센터를 열고 지역주민 100여 명을 고용했다. 이 가운데 청년들도 있다. 지역 대학 청년들은 한살림물류센터 현장 견학에 참여해, 생협의 물류라인 및 입출고 대기실 등을 둘러보는 등 생협의 생생한 물류 현장을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었다.

아이쿱 구례 자연드림파크는 지난해 4월 개장한 뒤 1년 만에 고용 인원이 260명에서 400명으로 늘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 의료, 주택 등의 인프라도 만들어가고 있다. 자연드림파크 안에 문을 연 구례 유일의 개봉 영화관에는 지금까지 3만 5,000여 명의 주민이 찾았다. 전남의 22개 시·군 중 영화관이 있는 곳은 구례를 포함해 4곳뿐이다. 올해 초 보건의료원에 산부인과가 다시 문을 열도록 지원했다. 앞으로 구례에 없는 이비인후과도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의료생협법인을 만들 계획이다. 파크 인근 문척면 안지마을에는 조합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택단지(60가구)를 짓고 있으며, 최근 문을 연 수제 맥주 공방에서는 공연 등 젊은이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들, 협동조합 정보와 지식 접근 제한적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협동조합이라는 대안에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다. 2014년 청년허브 연구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이제 막 협동조합을 알아가

고 있고, 알고 있는 정보 수준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적인 정보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강연이나 교육을 받아본 비중이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았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는 주로 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걸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 진출 선택지로서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범위는 더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이나 실제 사례 등을 접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면 참여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은 있다. 기존의 협동조합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특히 자금력이나 사업 경험이 약한 청년들은 곧바로 협동조합을 창업하는 것보다는, 기존 협동조합에 조합원이나 직원으로 참여하여 경험을 쌓고 정보를 충분히 얻는 단계가 필요하다.

공교육, 박람회 등 협동의 경제 접할 기회 늘려야

그렇다면 청년과 협동조합을 어떻게 더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기회 자체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청년허브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나 협동조합 기업을 접촉할 기회가 매우 적다. 사실 이런 점은 우리의 초·중·고 경제 교육 현실을 들춰보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일반 학교 교과과정에서 협동의 경제에 대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초·중등 경제 교육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올해 초 서울시와 교육청이 손잡고 초·중등 사회적경제 교과서 만들기에 나섰다.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라 시장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등의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발된 인정 교과서는 인천, 경기, 강원 등에서도 함께 사용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교과서 개발과 더불어 더 많은 학교협동조합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돼 사회

적협동조합이 학교 매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도 만들어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학교에 친환경 먹거리를 파는 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하는 ‘학교협동조합 시범학교’ 1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협동조합 방식의 매점은 경기 평택고, 성남시 복정고, 서울 구로구 영림중, 부산 국제중·고 등 이미 전국 10여 곳에서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초·중·고에서 부는 협동의 경제 교육에 대한 변화의 훈풍과 더불어 생협 등 기존 협동조합들은 청년들과의 접점을 더 넓혀나가야 한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협과 협력하고 힘을 보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봐야 한다. 아울러 공동의 사업 등으로 청년들이 대학과 지역에서 협동의 경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길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들은 취업박람회 등에 참가해 협동조합 기업들에 대한 인지도와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후배들과 경험을 나누는 기회도 결들여져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는 아이쿱 협동조합 지원센터처럼 설립 때부터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준비 없이 창업을 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협동조합에서 일한 경험을 전제로 창업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에 담긴 내용처럼, 협동조합은 운동과 사업의 균형과 지속성을 위해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한국의 협동조합도 일자리, 교육과 훈련,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과 관계를 맺어간다. 하지만 아직은 일부 소비자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에 한정되어 있는 수준이다. 여전히 한국 청년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갖고 있는 정보의 수준은 낮다. 무엇보다 청소년 시기에 공교육에서 협동조합 등 협동의 경제를 접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에서도 대학생협 등 협동의 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접촉점이 생겨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협동의 경제를 접하고 일해 보면서 취업과 창업의 진로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업 등의 문제는 그들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한다. 청년이 떠나는 사회는 미래의 희망도 같이 가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icoop](#)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¹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이영룡(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1. 서론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이라는 세대 집단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증폭되었다. 그중 특히 부각되는 부분은 청년들이 처한 경제적 토대의 허약함이다. 대표적인 ‘청년 수식어’ “88만원 세대”가 그러했듯, 이러한 진단은 청년 세대가 직면한 분명한 경제적 위기를 보여주지만 어찌할 수 없는 ‘시장경제 중심의 정체성’으로 이들을 낙인찍은 효과를 만들기도 했다. 물론 실제로 경제적 부자유란 수많은 개개인들에게 그들의 자유 의지와 상관없이 한 곳에 머물게 하거나, 혹은 끊임없이 타율에 의해 떠돌게 만드는 일차적 제한 사유가 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진단이면 충분할까?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분명 이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을, 청년 세대가 갖는 정치적/문화적/미적 욕구, 존엄의 추구 역시 기존 담론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걸까? ‘소비자’이자 (착취 받는) ‘임금노동자’의 위치로만 설명한다면 청년 논의는 단순화되고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그 밖의 실존의 경험과 욕구를 아우르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이를 자본 중심의 규율 체제로 다시금 읽어낼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의미의 실존 양식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백을 읽기보다, 경제적 생존으로 존재를 환원하는 청년 세대 담론에는 더 많은 질문과 대답의 목록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청년과 노동 두 주

1 이 원고는 2014년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의 청년연구 프로젝트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한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연구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보고서 참조. 이영룡, 명수민 (2014). 『한국 청년 세대의 사회적 노동 경험 : 2010년대 청년들의 자기 서사와 노동 서사를 중심으로』,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http://youthhub.kr/notices/546c757dcf977233cd00011f>

제를 이었다. 그리고 특히 청년의 ‘사회적 노동’²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동은 분명 삶의 다양한 모습과 가치들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생존’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에 대한 규범적 모델과는 다른 방식의 삶과 노동을 모색하는 일군의 청년들에게 사회적·공적 의미를 갖는 일이자 개인의 실존과도 일치할 수 있는 제3섹터의 일자리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도 한다.³ 불확실성 속에서 개인들은 더 이상 미래를 사회나 공공영역에 맡기지 못하게/않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의 대안으로 ‘사회적’ 활동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3섹터, 공공·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사회적 노동은 하나의 의제가 됐고,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흐름과 정책 영역에서도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에 속하던 비정부기구와 시민운동단체 외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노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며 지원과 제도적 장치들이 풍부해짐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 노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양한 관련 일자리로 유입되고 있다. 이전에 비해 오늘날의 ‘활동가’들이 한층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와 활동 내용을 다루게 된 것도, 곧 노동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필요, 욕구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 사회적 노동의 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정책과 담론 속에서 청년들이 어떤 삶과 노동을 원하며, 노동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일에서 생존만이 아닌 성장을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관심은 아직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 노동은 시간과 능력(노동력)을 화폐와 교환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꾸리며 새로운 행위 양식을 습득하는 배움의 계기이기도 하다. 때

2 모든 노동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성격을 띠기에, 여기에 또 다시 ‘사회적 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난 청년 활동가들이 위치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의 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부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설정한 ‘사회적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용어의 더욱 상세한 용법 및 서술은 2장 참조.

3 조한혜정(2010). 『후기 근대의 청년, 비물질노동, 그리고 사회적 경제』, 228~242쪽. 서울청소년창의서밋자료집.

문에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 노동 영역의 청년들의 경험에 대해서 우선 탐색해보고자 한다. 관계적, 문화적 만족감, 배움을 내포하는 ‘좋은 삶’에 대한 청년들의 바람은 사회적 노동의 영역 내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혹은 표류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글을 구성할 것이다. 사회적 노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실제로 사회적 노동 영역의 청년들은 어떤 노동을 경험하며, 청년들은 이 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영역이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청년들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경유해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새로운 설명과 해석의 고리 잇기를 시도했다.

우리가 사회적 노동의 장(場)에서 만난 청년들은 보조 참여자 1명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연령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걸쳐 있고, 보조 참여자를 제외한 참여자들이 사회적 노동 영역에 몸담은 기간은 2년 이상으로, 가장 오래된 경우 4년이였다.⁴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1) 1년 이상 사회적 노동을 지속하는 중이면서 동시에 2) 20~30대일 것, 두 가지를 고려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해 우리는 사회적 노동 영역의 광범위한 외연을 세 범주로 축소하고, 그중 최근 새롭게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게 된 영역으로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현장을, 그리고 대표적인 사회적 노동의 현상이었던 시민사회단체 현장을 선정해⁵ 각 영역별로 3~4명을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2014년 7~9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대개 1명의 인터뷰이(연구 참여자)와 2명의 인터뷰어(연구자)가 만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기

4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여성 7명 남성 3명으로, 연구 설계 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특별한 변수로 설정하지는 않았기에 다소 불균형한 편이다. 이는 특히 우리가 정해진 연구 기한 내에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스노우볼(snowball)’ 형식, 즉 연구자들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인터뷰이를 모집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 연구가 갖는, 그리고 후속 작업에서 고려될 한계이자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 세 영역은 최근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사회적 노동에서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일부’임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우리의 보고서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임의적인 부분의 범주화로 한계 지어지기 때문이다.

본적으로 1회,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1회당 짧게는 1시간 30분, 길게는 4~5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이나 사회적 노동 조직의 고유명사는 모두 가명이다.

2. 사회적 노동 : ‘노동’과 ‘운동’, ‘활동’ 사이

‘운동’ 이라면 왠지 돈도 못 받고 일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대로 된 임금도 못 받고, 자기가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서 헌신하는 느낌이 있고, ‘활동가’라고 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 받으면서 헌신하는 (웃음) 그런 느낌이고, ‘노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도구적인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단어 자체에서. 근데 한 명의 활동가나 한 명의 노동자 안에서도 이 모든 스펙트럼이 다 있죠.(손도진, 협동조합 4년차)

우리는 노동 일반에 대해 이야기해왔을 뿐 아니라 노동이라 불리는 수많은 일의 결에 대해서도 끝없이 말해왔다(임금노동, 열정노동, 비정규노동, 가사노동, ‘밀바닥’ 노동...). 그럼에도 노동에 대한 우리의 삶은 변화하고 있는 노동의 복잡한 현실은 물론 노동자의 삶보다 굵뜨게 변하고 있다. 그렇기에 변화하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시급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 노동’을 키워드로 노동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의 풍경에서 빈틈을 찾아내 꼼꼼하게 메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2장의 목표는 우리가 만난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이 갖는 특징에 대한 추상적 소묘를 일별해보고, 이후에 이어질 논의의 밑절미로 삼는 일이다.

우리는 사회적 노동의 장에서 살아가는 연구 참여자들을 만난 직후부터 이들의 사회적 노동 이야기가 복잡한 주름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⁶ 위에 언급한 손도진의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청년들의 사회

6 우리는 보고서의 4장에서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적 노동이 단지 살림살이를 유지하고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경제적) ‘노동’만도, 세계를 바꾸려는 가치 지향적·규범적 실천으로서 (정치적) ‘운동’만도, 또한 주변을 보살피며 관계성을 구축·유지해나가는 (사회적) ‘활동’만도 아니라는 점이었다. 우리는 이 모든 행위의 양식이 중첩된 노동을 일컬어 사회적 노동이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 행위 양식은 사회적 노동의 장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일어나는 조건이자 일상에 긴장을 유발하는 이유이며, 끝없는 반성과 변화를 이끄는 힘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은 청년들의 실존적인 절실함, 경제적 자립과 생존에 대한 의지, 사회적 존재감과 인정에 대한 욕구, 더 나아가 청년들을 “일회용”이자 “X포세대”로 만드는 국가-자본-시장사회라는 지평을 넘어 ‘다르게 살고 싶은’ 지향,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적 지평과 사회적 연대에 대한 상상과 실천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사회적 노동의 장은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꿈(이상)’이 중첩되고 혼종된 영역이 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지극히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혁신’을 지향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개인적’인 동기로 사회적 노동을 시작하고 이를 늘 중시하면서도 ‘공적’인 언어를 동시에 구사하고 실천하는 것 역시 이와 연결돼 있을 것이다. 때로는 사소해 보이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거나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은 이러한 결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 경제 영역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제도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중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을 포함한 사회적 노동의 장은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유력한 터-유일한 터는 아니다-가 되어왔고, 여전히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사회적 노동 영역을 이해하는 방식, 이 장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들의 사회적 노동은 오늘날의 ‘청년됨’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노동의 현실과 이상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패치워크로 짜내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

야 하는 것은 이러한 청년됨과 노동에 대한 청년들의 보다 상세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노동의 장이 정말 청년들의 자리가 되고 있는지 각자의 시선으로 따져보는 일일 것이다.

3. 청년과 사회적 노동의 만남

‘청년’ 범주의 이중적 효과

누가, 어떻게, 언제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이것은 ‘청년○○’ 문제를 언급할 때 중요한 물음이다. ‘청년-명명법은 어떠한 상황과 효과를 낳는가?’ ‘이는 정확히 누구를 지시하는가?’ 등의 질문에서처럼 청년을 둘러싼 것들이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앞서, 잠시 이 ‘청년상’ 강요를 통해 발생될 수 있을 착취의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 용법은 당사자들의 불만을 불러오는 것과 동시에 아이러니하지만 때론 ‘위로’와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중적 범주이기도 하다.⁷ 이는 흥미롭고 역설적이게도, 청년 활동가가 처해 있는 현실의 열악함과 불만족스러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난 연구 참여자들 중 몇몇은 자신의 노동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느끼는 만족과 긍정적 영향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공적 언어로 의미화 되길 바라는데, 그럴 때 자신의 경험이 기존의 청년 담론과 만났을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한편으로 이것은 “청년이라는 담론에 기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 담론이 공적 영역에서 갖는 의미와 위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청년들의 사회적 인정 욕구와 위치 짓기 욕구의 측면에서, 청

7 “네가 부딪치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긍정적 인 해석을 할 수 있어서. 그게[그것 때문에] ‘청년활동가’라고 하고 싶은 거 같애. ... 그것들이 사라지면은 힘든 것만 남는 거 같고.”(차은진, 시민사회단체 3년차)

년이라는 범주화가 이들이 임파워먼트(empowerment)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 청년이라는 집단이 겪고 있는 ‘스펙’과 경력을 요구하는 외적 압박과도 관련되는 것도 물론이다. 현재의 경험이 앞으로도 유효하게 연결되려면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진다. 학점, 영어시험, 각종 수상과 봉사활동 경력 등의 스펙이 기본이 되는 현실 속에서 선택한 다른 트랙의 삶, 청년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경험을 사회에서도 인정받길 바란다. 그러나 ‘청년답게 열심히 사네’라는 독려마저 없으면 “힘든 것만 남는” 것으로 느껴질 만큼, 실제로는 그 노동의 현실조차 쉽지 않다. 이렇듯 역설적이게도 청년 활동가가 본인을 ‘청년’으로 소개하며 청년 정체성을 부각시키게 되는 건, 사실상 위로와 열정과 관련된 청년 담론의 ‘수혜’에 지금의 힘들음을 맡기고 싶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다시 뒤집어보면, 실제로 사회적 영역 내에서 청년 임파워먼트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경제적, 정서적, 물질적 토대가 거의 부재하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

‘대의’가 아닌 ‘삶’의 노동

우리가 만난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노동 영역의 문제는 단순히 임금 등의 객관적 요소들에 의해서만 구성되지 않았다. “월급을 올리자”는 주장만으로는 많은 청년들이 이 영역으로 들어서는 이유가 명쾌히 설명될 수 없다. 그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중심축으로서 ‘의미’와 ‘가치’ 실현이다.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이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노동 환경에서는 진정 빛을 발하기 어려운 협동적 활동도 이에 포함된다. 사회적 노동의 장이 이러한 노동을 가능케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충족되기는 쉽지 않다.

이 노동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뭘 기대하느냐, 그렇다고 했을 때 전 두 종류인 거 같아요. 자발성이랑 그리고 내가 협동을 해서 노동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발성에 근거한 노동이고 협동 노동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시민사회에 뛰어든다구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데 그게 좌절될 때 이거는 뭐,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신감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거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 이거 되게 큰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왜 나한테 안 주느냐. 내가 돈을 많이 달라고 했느냐, 이런 게 아닌데.(손도진, 협동조합 4년차)

이러한 균열은 특히 스타트업(start-up) 조직보다 나름의 역사와 선배 세대가 있는 조직으로 들어간 활동가들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현재 청년 세대의 욕구와 바람은 종종 사회 운동이나 활동 영역의 기성세대인 선배들과 만났을 때 갈등의 형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삶이 활동이고, 내 활동이 곧 삶”이라는 선배들의 말은 사회적 노동 장의 청년들이 바라는 삶의 모습, 즉 생활-활동이 연동되고 삶 속에 활동이 스며 있는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청년 스스로 받아들이고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권력’이란 이름으로 강요된다. 많은 사회적 노동 영역의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 배경은, 이러한 ‘헌신’과 ‘삶을 바치는 노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현실 속에 이들이 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다. 한 번도 ‘좋았던 시기’를 갖지 못한 세대에게 “우리 그때 한 달 20만원 받고 일했다”는 것을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 선배들의 비난은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⁸ 소위 386세대 운동가와 2010년대의 청년 활동가/사회적 노동자가 생각하는 활동의 상(狀)은 같을 수 없다. 몇십 년 사이, 한국 사회는 상당히 변했고 그에 따라 운동과 노동 환경 역시 변화했다. 이를테면 ‘시대

8 한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현재 청년 세대들이 처한 물적 조건을 80~90년대에 활동 영역으로 들어섰던 기성 선배 세대와 비교하며 “우리 세대들이 삼겹살이나 치킨은 많이 먹지만 집이 없고, 그 선배 세대들은 삼겹살이나 치킨을 많이 먹지 못했지만 집은 있다”는 흥미로운 비유를 들은 것을 전해주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경제지표로 자가 소유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비유는 명쾌한 부분이 있다.

양식'이 변화한 것이며, 대중의 관심을 얻고 운동을 펼쳐가는, 활동이 기반한 사회의 총체적 환경이 변화한 것이다.

청년 세대가 갖는 경제적 기준은 더 소박해졌지만, 이들이 삶에서 고려하는 다른 기준과 가치의 다양성은 '헌신권력'과 강고한 조직문화가 여전히 압도하는 현장에서 쉽게 고려되지 못한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외부의 인정과 욕구를 우선하는 삶이 아니라, 청년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자신의 삶의 즐거움과 의미들 역시 찾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이는 활동과 노동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지 않았던 선배 활동가들과 다르게, 청년들에게엔 사회적 노동이 일종의 '일자리'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자원봉사나 파트타이머가 아닌 전일제 노동자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그 일이 개인의 삶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함도 역시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시에 그 안에서의 청년 개인의 정서/정신적, 생활의 지속이 가능한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4. 사회운동 위기 시대의 사회적 노동

우리는 이 글에서 사회적 노동 장의 청년들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현재는 청년 활동가뿐 아니라 진보운동 진영이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와 좌절을 겪고 있는 시기다. 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조건뿐 아니라 사회운동/활동가가 발 딛고 서고, 바꿀 수 있던 사회 범위조차 극히 좁아지고 있다. “누구 하나 쉽게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생존주의 사회에서 가치 추구의 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러한 반문은 청년 활동가들의 것만은 아닐 것이다. 무력해진 사회운동의 상황 아래, 한편으로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질서에 대항하고 균열을 내고자 하는 운동 방식이 오히려 그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는 인식 역시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시대가 변했듯 운동 방식과 내용 역시 변화하게 될 테니, 멀어져간 대중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한 다양한 활동 방식이 강구된다. 그러면서 이것은 활

동가가 마치 소비자에게 ‘뭔가를 파는’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듯이 느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이템을 파는 거죠. 감성을 팔든, 환경을 팔든, 여성을 팔든, 어쨌든 뭔가
팔려는 거에 계속 아이디어를 쏟고 내가 하는 게 거기 안에만 국한되는 게 많
은 거죠. 누군가가 확장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다, 하는 거를 꼭 짚
어서 얘길 해주는 사람, 지속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걸 지지해주
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3섹터에, 그러니까 고립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청년들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일하면서 갈리면서 선배들 미워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정지현, 시민사회단체 3년차)

마치 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처럼 ‘사업 진행’이란 말은 조직 내
부에서도 흔하게 쓰이고, 아이템·사업·콘텐츠 등의 활동 내용은 기금을 따
낼, 혹은 조금이라도 더 드러나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협소화
된다. 조직은 수익성 사업과 비수익성 사업을 끊임없이 나눌 수밖에 없고,
‘시민 없는 단체’란 표현이 익숙해졌듯이 밑으로부터의 지지 대신 위로부터
의 자금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청년들의 자존감과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심각한 실존적 고민은 물론 사회적 노동과 활동 자
체에 대한 회의를 안겨주게 된다.

위와 같은 사회 배경 아래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내 노동으로 무엇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노동’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노동 현장이란 단순한 임노동
의 현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는 준엄한 결단의
현장이지만도 않다. 예컨대 이들은 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탱하
는 공동체의 실험장인 동시에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자극을 주는 작업장, 자
신의 작업을 소모시키지 않는 주체적인 결정과 선택을 위한 공간, 자신의 생

활이 기반하는 마을에 애착을 갖게 만드는 삶터를 만들 수 있길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당위와 대의 중심의 운동이 개인에게 많은 희생과 양보를 요구했기에, 그보다는 재생산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고자 하는 주체성의 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나 전 사회를 두고서 변화를 구상하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나 동네 등 삶터 주변과 자기 자신의 삶을 운동과 노동의 현장으로 갖게 되는 경향과 맞물려, 현재 젊은 세대들이 꿈꾸고, 보는 운동의 결들이 한결 더 미시적이 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5. 사회적 노동의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에 대한 의지

5장에서 우리는 청년들이 사회적 노동을 지속하기 위해 어떠한 의미화와 실천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⁹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단순한 유행어와 수사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노동 조직의 일상과 영역 곳곳에 묻어나는 말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노동의 장에 편재한 염려의 근원이자 현실적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가 만난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노동을 하는 청년들은 ‘지속에 대한 의지(the will to sustain)’라고 이름 붙일 만한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물론 ‘지속’이란 말은 때로 ‘생존’ 가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존의 문제로 온전히 환원해서는 지속이란 말이 내포하는 다양성과 역동을 놓치기 쉽다.

먼저 우리는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은 청년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과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행위자들, 그리고 다양한 기관·제도·장치와 만들어가는 연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노동의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에 대한 의지의 문제는 청년들 각자의 현실에서 출발한 절박한 문제의식뿐 아니라, 사회적 노동 영역의 역사와 관계성, 그리고 청년에 대한 사회적 심려와 맞물린 새로운 통치·관리의 시선과 뒤섞이면서

9 이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4장 3절 참조.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의 ‘지속 가능’ 여부도 이 복잡한 연망과 제도 속에 청년들의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와 뒤얽혀 있게 된다.

물론 청년들이 사회적 노동의 장에서 간단히 자기들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사회적 노동 조직과 청년 구성원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노동은 전적으로 이른바 ‘공적’이지만 한, 따라서 ‘사적’ 영역의 이슈나 ‘개인’의 문제가 투영되면 ‘오염’되는 행위 범주가 아니다. 하지만 “조직과 개인의 분리 없이”, ‘조직은 곧 개인’이고 ‘개인이 곧 조직’이라는 기대를 받을 때 참여자들은 흔히 혼란을 느꼈다. 또한 부족한 경험과 어린 나이 등을 이유로 청년들이 조직에서 “허드렛일”만 하다 소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조직문화에서는 사회적 노동 조직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정작 내부 구성원들에겐 허락되지 않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기 십상이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사회적 노동의 장이 그런 것도 아니다. 예컨대 배우진의 이야기에서는 공적·사회적 목표와 개인의 목표에 모순이나 가치 위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났을 때의 일정 기간과 죽기 전의 일정 기간은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돌봄 관계망, 즉 나의 안전망, 나의 지지 집단, 나의 죽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나의 존엄한 죽음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나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 어떤 노후 준비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배유진, 협동조합 3년차)

한편 상품 가치가 있는 재화를 생산하기보다는 가치를 생산하고 가치 지향적인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은, 당연히 우리가 만난 한 참여자의 표현처럼

속칭 “돈이 안 되는 일”이다. 청년들의 마을살이 및 활동이 곧 “돈”이 되는 것도 아니며, 협동조합 등 조직에 속해서 임금이나 활동비를 받으며 일한다고 해도 도시에서 충분한 살림살이를 유지하기에 벅찰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사회적 노동이 지향하는 가치 생산의 지속 가능 문제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문제가 된다. 윤예림은 이 점을 체험에서 우러난 언어로 설명해준다.

이곳에서 하는 활동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늘 그렇잖아요. 가치가 혼자 ‘짚’ 있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에는 경제적인 것들이 늘 같이 있는 거고, 노동 환경이랑도 너무 연결되어 있고. 그런 데에서 빼그덕거리는 일이더라구요.(윤예림, 사회적기업, 1년 후 퇴사)

우리가 만난 사회적 노동 조직들도 모두 이 “돈”의 문제가 사회적 노동의 지속 가능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임을 인식하고 나름의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컨대 마을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참여자의 사례처럼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와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이 가진 전문 기술로 자립을 위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지방정부나 재단, 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수많은 지원/연구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의 노예”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모사업 실적은 개인과 조직의 “포트폴리오”로 관리되며 “스펙”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만난 청년들도 이러한 추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돈” 문제가 해결되면서 조금 더 ‘자립’적인 사회적 노동을 하는 사례도 있다. 협동조합 활동가로 일하는 한 참여자는 사회적 노동의 가치 생산과 실현을 위해 “돈”은 물론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저희는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경영이 그냥 영리조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려면 물질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협동조합을 확장하는 목표는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목적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종류의 것들 중 하나가 돈인 거죠. 어떤 종류의 하나가 돈 이면서 그 돈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영리 조직, 커다란 비영리 조직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 전문 인력이 필요하죠.(배유진, 협동조합 3년차)

그렇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 사회적 노동의 지속에 대한 의지를 단순히 경제적 생존의 관점에서만 파악해서는 문제의 복잡성을 쉽게 단순화시키게 된다. 사회적 노동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경제적인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더라도 다양한 장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다. 이를테면 협동조합 직원 손도진의 이야기처럼 조직의 역사가 오래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과정, 즉 어떻게 보면 사회적 노동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온 그 과정이 오히려 지속가능성의 장애물이 되고 따라서 지속에 대한 의지가 발현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는 예컨대 비교적 노동 기간이 짧은 청년들이 사회적 노동 조직 속에서 조직 민주주의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조직이 지금 갖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바꾸는 게 조직에 있는 힘의 균형에 균열을 가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쭉 시간이 가다보면 조직은 다른 환경에 처해 있거나 성격이 바뀌어져 있게 되고, 이 의사결정 구조는 맞지 않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조직 어딘가는 특히나 청년 활동가들 같이 말단에 있는 활동가들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악순환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의사결정 구조가 언제든지 어떻게든 바뀔 수 있다는 믿음, 그래야만 조직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믿음. 지금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바뀌면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손도진, 협동조합 4년차)

손도진이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주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정지현은 조직에서의 동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주목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정지현은 사회적 노동 영역의 선배 집단과 청년 집단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상적인 이야기를 남긴다.

이 지형에 들어온 청년 활동가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다름을 상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다름을 꿈꿔. 다름을 상상해. 구체성은 모르겠지만 다름에 대한 욕구를 제3섹터에 투영하는 건데, 안 그러면 버텨낼 수가 없어요. ... 당연히 청년들이 [제3섹터에서] 받기만을 원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선배들이나 기존 사람들이 예민하게 이 사람의 문제를 먼저 물어봐 주고, 파악하고,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주려고 많이 애쓰는 태도랄까? 그런 태도를 내가 많이 봐왔고, 많이 받았어. 아무런 평가 없이. 그런 걸 받으면 전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돼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정지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년차)

물론 손도진과 정지현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또한 정지현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회적 노동의 장에서 선배들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사회적 노동 조직에서 청년들이 적절한 ‘자리’를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사회적 노동의 장이 청년을 포함해 도래하는 이들을 ‘환대’하고 있는

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¹⁰ 특히 오늘날 ‘청년’이 문제시 되면서 새로운 통치와 관리의 규범이 광범위하게 생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사소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노동의 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또는 청년들의 지속에 대한 의지가 새로운 삶과 정치의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으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생의 약동을 잃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삶의 운동이며, 지속에 대한 의지와 분리할 수 없다.

6. 결론

우리는 이 글에서 사회적 노동 장의 청년들의 서사를 통해, 사회적 노동의 특징을 살피고 오늘날 청년과 사회적 노동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먼저 우리는 사회적 노동을 ‘노동’과 ‘운동’, 그리고 ‘활동’의 영역을 가로지르는 노동의 양식으로 규정했다. 이어서 사회적 노동 영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에 주목해 ‘청년됨’과 ‘사회적 노동’이 어떻게 해석되고 의미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나아가 사회운동 위기 시대에 청년의 사회적 노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려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실천에 주목해 사회적 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지속에 대한 의지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위의 논의들은 온전히 완성되지 못한, 더욱 진전되고 확장된 후속 논의를 위한 우리의 부분적인 질문과 답변이다. 이것은 다시금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논의와 더욱 다양한 질문과 탐구로 이어질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이 글이 청년들의 사회적 영역의 노동 경험에 초점을 맞춘 만큼, 우리는 최근 한국에서 술하게 소환돼온 청년의 위치성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우리는 사회적 노동 영역에서 발휘되는 청년들의 정체성이, 그간 한국 사회에서 습관적으로 정형화되어 반복돼온 ‘청년’의 이름 부르기와 같은 ‘호명’과 ‘포섭’의 문제에

10 이 아이디어는 부분적으로 김현경(2015), 『사람, 장소, 현대』, 파주: 문학동네, 에서 영향을 받았다.

덧입혀지는 측면은 없는지 묻게 된다. 이는 곧 ‘청년’에 자주 따라붙는 ‘혁신’, ‘창조’, ‘창의’ 등의 용법이 실제로 어떠한 면에서 소모되거나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무엇보다 ‘혁신’, ‘청년 활동가’ 등의 용어는 이들의 노동 현실을 낭만화된 개념으로 해석해버릴 우려도 있다. 청년들이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창발적 아이디어와 열정에 의존할 때 노동이라는 기본적인 기반을 모호하게 만들어 노동 현장의 노동조건과 역사를 가려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적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날 사회적 노동에서 ‘사회(적인 것)’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잠재성을 내포하는지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사회적 노동은 노동이 일어나고 있는 특정한 사회(혹은 사회적 연망)를 전제하고 있지만, 동시에 특정한 사회(적인 것)의 상을 지향하고 이를 생산하고 있는 노동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지금 당장의 사회적 노동 현실과 조건을 넘어서는 사회적 인정과 정치에 대한 공통감각(the common sense)의 토대를 만들고 지평을 넓히는 일에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노동은 개인적 취미와 기질, 관심의 영역에 영영 갇혀버릴 위험이 클 것이다. 사회적 노동 조직도 단지 유사한 자아들(alter egos)이 모인 동질적 집단이나 연망에만 머문다면 사회적 노동에 기대되는 공적 토대를 스스로 허물게 될 수도 있다.

2015년은 사회적 노동에 대해 설익은 대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질문 외에도 질문의 목록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사회적 노동 영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도와 목소리의 ‘얼룩’들에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즉, 사회적 노동은 여전히 ‘출구’가 아니라 새로운 ‘입구’다. [icoop](#)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때/곳 : 2015년 5월 12일(화)/ 스페이스 노아

참석 : 김진희(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임소라(민달팽이 협동조합 팀장)

조한솔(동네방네 협동조합 이사장)

사회/정리 : 김지만(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직원)

사회 : 주거, 실업이라는 청년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동체, 소통과 관계 중심의 대안적 삶,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을 청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청년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소개는 많이 기사화가 되었거나 『생협평론』 특집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이 내용들과는 다른, 청년 개인의 삶과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대한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 사회에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와, 이 위기 속에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으로 선택한 과정과 이유, 그리고 민감한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어려움들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있는 일, 현재의 모습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간략하게 풀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만(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직원)

2013년 4월 입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교육과 연구 성과물을 대중에게 공유하는 홍보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현재는 아이쿱생협에서 월급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수준. 청소년부터 YMCA활동을 하며 청소년운동, 청년운동, 시민운동을 하며 공동체, 사람다운 세상을 밝히는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조한솔: 춘천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지역에 취약계층을 바라보면서 자립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다가 우연하게 학교에서 2010년 1년 정도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때 가서 협동조합을 배우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오자마자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나 사회적기업협의회에 있다가 육성사업 1기에 선정되었고 그렇게 동네방네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춘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구도심을 어떻게 하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됐죠. 처음엔 2012년부터 전통시장 안에 카페를 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여관들의 방문객이 끊기면서 여관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지역을 활성화하자라는 차원에 5명의 조합원이 10년 정도 방치되었던 여인숙을 활용해 지금의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영업을 하면서 행정, 회계 등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현장, 실전에서 뛰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전부 같이 살면서 마을 공동체, 주민들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고 있어요.

김진희 : 처음에 청년연대은행에서 일하게 된 것은 군대를 전역하고 뭐 먹고 살지에 대해 고민하던 때예요.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봤습니다. 마침 청년허브에서 청년혁신활동가 추가 모집이 있었는데 중간에 하는 추가 모집이라 4개월 정도뿐이었지만 12월에 업무를 마치고 바로 복학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이 시작이 현재 모습까지 오게 됐습니다.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금융, 보험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협동조합으로 정식 등록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다른 운영 구조나 내용에서는 조합원 정기총회 등의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고 있죠. 4백여 명의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비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자금을 가지고 조합원 대상 소액 대출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

양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소라 : 백수 시절에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주거상담사 교육을 진행했었어요. 웬지 전문 직업 같은 느낌이 들어 첫 회에 들어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갔더니 전문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유니온과 연을 맺게 되었죠. 민달팽이 유니온을 통해 청년허브를 알게 되고 청년혁신활동가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시작한 시점에 민달팽이 협동조합을 창립했는데 저를 포함해 경영학을 전공했던 두 사람이 업무를 주로 맡게 됐어요. 한 친구는 재무와 법인 업무를 그리고 저는 달팽이집 공급 관련 모집과 커뮤니티 운영 같은 살림을 맡아 어느덧 1년이 되었네요. 달팽이집에서 조합원들과 같이 살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보여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일단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과 함께하고 있어서 인건비 같은 부분의 운영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올해 안에 독립적인 운영을 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주택협동조합 자체가 초기에 워낙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 큰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전액을 모으고 있어요.

사회 : 조한솔 이사장님은 프랑스에서 공부도 하시고 다른 분들도 여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사회 전반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과거의 경험에서 듣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 현장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김진희 : 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없이 백지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냥 주위들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고 말을 많이 듣게 됐는데 아무래도 성공 사례 위주의 이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구나 생각했어요.(웃음)

사회 : 다른 분들도 정말 많이 공감하시나 봐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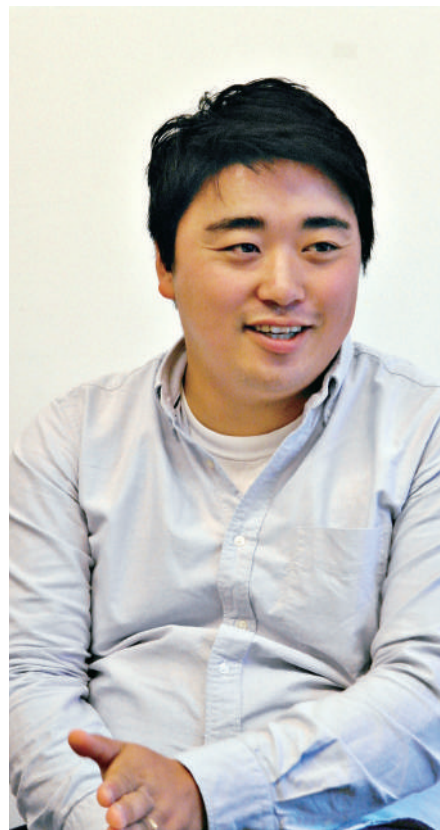
조한솔 : 전부 비슷하지 않을까요?(웃음)

김진희 : 맨날 만나는 여자 친구와도 싸우는데, 전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300~400명 모이면, 또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고 나오면 나오는 사람끼리 문제가 생겨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맞춰나가야 하는지, 또 회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협동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았잖아요. 지금에서야 정말 다름을 인정하는 것, 소통하는 것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기 전에는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어려웠지만, 여전히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조한솔 : 저도 비슷할 것 같은데 동네방네 협동조합도 시작한 협동조합이 아니었어요. 협동조합기본법 없을 때 동네방네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 나서 기본법이 생긴 후 임의단체로 잠시 있었죠. 법인 선택 시점에서 구성원들과 반년 정도 고민 하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 같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동의하게 됐습니다. 주식회사로 할 걸 하는 후회도...(웃음) 협동조합이 재밌기는 한데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구성원들이 다 같이 살고 한 곳에서 살고 있어서 거의 24시간을 보고 있죠. 각자의 성향, 성격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반대를 하면 왜 그러지라는 것이 금

조한솔(동네방네 협동조합 이사장)

2012년 3월 동네방네 설립. 동네방네 협동조합에서 대표를 맡고 있으며 영업, 홍보, 행정, 회계 등 법인운영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합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적은 월급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대학 때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에 관심이 많았으며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새 다 보이는 수준이에요. 요새는 우리 내부에서 협동조합 가치들을 잘 작동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구도심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양해서 여관업, 시장에서의 활동 등에 당면한 문제가 각각 따로 있더라고요. 각자가 따로 모여서 각자가 성장을 해서 모이는 것이 동네방네 협동조합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 되지 않았죠. 구성원들 안에 지식의 차이도 있고 협동에 대한 서로의 생각도 달라요.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 참고할 만한 것도 없고 계속 싸우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는 생계형이라 사업에서 다급한 쟁점들이 있는데 의견 충돌 협의 과정에 길어지는 문제도 있어요.

사회 : 우리나라 특성상 혁신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이 특히 삶에서 더욱 위험에 놓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한솔 이사장님께서서는 생계형 협동조합 ·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에 대한 위험부담과 요소들이 있었을 텐데 이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조한솔 : 사실 그런 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웃음). 저는 사회복지를 대학에서 전공해서 길이 명확했죠. 졸업을 하면 사회복지관이나 공무원을 하면 되요. 그런데 졸업할 시기에 프랑스에서 배운 것도 있고, 관심사도 이쪽에 있었고 몇 년 간 다른 일을 해봐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다른 일을 창업이라는 방식으로 풀렸던 것뿐입니다. 어쨌든 2~3년 동안 하는 일에 뭔가 잘 못되어도 복지관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물론 부담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벌지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만큼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협동조합을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 임의단체로 있을 때는 개인적인 재무적인 책임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빚도 많이 지고 혼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분

명히 우리가 같이 만들자고 했었는데 주목받는 것도 저만 주목받아서 문제를 의식하게 됐죠. 이 시점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풀어보자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누구나 계좌를 볼 수 있고 재무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오픈하면서 그 리스크도 함께 짊어져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사회 : 김진희 이사장님은 대학교 자퇴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결단을 어떻게 내리게 됐는지요?

김진희 :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고민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했었어요. 많은 고민을 안고 일단 군대를 갔죠. 제대를 한 후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대 후에도 여전히 철이 들지 않았어요(웃음). 그렇다면 학교는 그만두고 싶은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013년 9월에 청년연대은행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 반 정도 일하고 올해 이사장 출마를 고민하면서 그동안의 고민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학벌구조, 사회 시스템에 대한 반대도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생계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고요.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1년 반 정도의 활동에서 이렇게 살아도 굶어죽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위에 좋은 사람들,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근으로 조합원의 녹을 먹고 있고요.

사회 :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에서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 있나요?

임소라 : 3가지 정도 떠오르는데, 하나는 확장입니다. 현재 1, 2호가 마무리가 잘됐고 3, 4호는 올해 안에 진행을 해야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이 살기 때문에 주체성 등이 잘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회원들도 달

팽이집에서 만나는 것으로 단체에 더 긍정적인 이해도를 높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고민되는 지점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공과 사의 균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냥 사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포럼 등에 나갔는데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너무 당황했죠. 다르게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없던 방식인데 있던 것으로 맞춰서 설명하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었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가치와 방식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하려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택협동조합에만 약 140명의 조합원이 있어요. 그에 비해 달팽이집이라는 주택으로 혜택을 받는 조합원은 17명으로 낮은 편이죠. 그럼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고민하고 논의 중입니다.

김진희 : 당장은 조합원이 늘어나야 임금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고 사업에 관련된 것은 지원 사업도 일부 받는 등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급여 인상도 급여 인상인데 4대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을 어떻게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지금 있는 2명의 상근자가 단순히 398명의 고객들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가면 협동조합이 아닐 거예요. 올해는 청년활동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상근자가 5~6명에서 올해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신이 없고 하던 일도 멈추게 됐었죠. 그래도 그때 상근자가 많으니 조합원들이 그냥 고객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협동조합 취지나 가치에 맞지도 않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기회가 돼서

조합원들이 같이 직접 운영을 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이해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서로 맞추는 것에 가장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조한솔 : 협동조합 가치가 잘 작동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단위별로 이슈들이 다른데 의사결정 할 때 그 수준을 어디까지 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예를 들어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올리기 위해 프로모션 전략을 짜 왔는데 카페를 운영 하는 친구가 회의에서 반대를 하면 그동안의 고민이 무색해지는데 그게 적절한가? 과연 협동조합 안에서 의사결정이 한 친구는 몇 분 듣고 한 친구는 며칠 동안 고민해서 가지고 온 안전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과연 적절한가라는 수준을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 고민이죠. 디테일하게 고민을 같이 하다보니까 사업도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혼자 결정하는 것도 회의 때 꼭 같이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수준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네요. 일일이 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 나누자니 구성원끼리 따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걱정이예요.

사회 : 세 분 모두 많은 고민을 안고 지금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지금의 활동(일)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나요? 혹은 그래서 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임소라 :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연구용역이나 회원들의

임소라(민달팽이 협동조합 팀장)

2014년 2월 민달팽이 유니온 입사. 경영학 전공이라는 이유로 주택협동조합 팀을 맡게 되었고 동시에 메일링, 문자 등의 회원 데이터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비영리 주거모델 달팽이집의 공급과정에서 모집, 운영 일도 하고 있다. 동시에 달팽이집에 살고 있기에 입주조합원과 직원 사이에 있어 '임집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공동체가 잘 형성되고 지속하도록 결에서 보듬는 역할을 주로 한다. 피로도가 적지 않아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같이 사는 재미에 빠져 전 생애에 걸쳐 공동체적으로 잘 살아갈 삶을 계획하는 중이다.



회비를 모아서 협동조합 임금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협동조합 자체로는 직원 월급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연내 목표는 1~2명 정도는 임금을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제가 1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 돈으로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엄청 빠듯해요. 지금의 상태로 '모은다'의 개념은 거의 없어요. 현재는 당장 먹고살지만 앞으로 가능할지 고민은 많죠.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잘 살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해요.

김진희 : 아직까지 여기서 받는 월급으로 제 삶을 꾸려나가고는 있어요. 나중에 이사장 임기 2년 종료에는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현재로서는 미래 계획은 없네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그 이후의 일은 그 이후에 삶이 이끄는 데로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 : 사실 저도 대학교를 자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26~27살 때쯤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가 되었던 거죠. 스펙에 밀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어떡할지, 그리고 돈을 벌어서 삶을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 걱정은 없었나요? 특히나 청소년 80%가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과 다른 방식의 길을 걷는 두려움은 없나요?

김진희 : 전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을 졸업해도 어차피 먹고살기는 쉽지 않다(웃음). 대학 등록금으로 2천만 원을 더 쓰지 않은 것이 더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에 대해 다들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에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을 정도로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학에 가지 않고도 먹고사는 것에 문제

없다, 혹은 소득은 높지 않더라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시아가 트이고 대학은 선택일 뿐이라는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고 싶기도 해요. 그래도 이것과는 별개로 저도 생계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걱정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느낀 것이 있는데 그전에는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막상 나와서 살아보니 저를 굶어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게 됐죠. 지금은 제 돈으로 월세도 내고 밥도 사 먹고 살지만 나중에 그렇지 못하는 긴박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회 : 공동체에서 일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개인의 삶을 의지할 수 있고 믿음이 생긴 것이군요. 그럼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조한솔 이사장님의 동네방네 협동조합에서 운영 매출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요?

조한솔 :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웃음). 시작 이후로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 연말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을 발생했어요. 지금의 형태로 가시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생계형에 가까운 5명의 협동조합이고, 저도 서른이 됐어요, 이전까지는 지역에서 하고 싶은 활동들을 경험하는 것이었으면 이제는 동네방네로 50대까지도 지속 가능하게 먹고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기가 됐어요. 처음에 급여가 50만 원, 그리고 65만 원, 현재 조합원 모두 12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다 같이 눈에 보이니까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했을 때 피드백, 실패 혹은 성공에 대한 피드백을 빨리 받으니 동기부여가 많이 되죠.

사회 : 급여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은 없어요?

조한솔 : 다른 곳에서도 그 정도 받을 텐데(웃음). 급여가 120만 원이면 적은 편인데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고 생활비를 줄이면서 비슷하게 맞출 수 있었죠. 급여를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데 더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더 쌓아놓자고 결정했습니다. 서로가 다 이해하고 있기에 큰 불만은 없어요. 저는 따로 다른 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동네방네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이 직접 사업 운영을 하다보니 우리의 노력에 따라 급여 수준이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은 사업 활동에 따라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급여 구조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임소라 : 농담처럼 달팽이집이 30호쯤 되면 월급이 260만 원 정도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계산해봤더니 같이 260만 원을 받게 되는 대신 일하는 사람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죠(웃음). 농담처럼 이야기해요. 이렇게 급여문제가 걸리긴 하는데 일의 양이 많아진다 해도 협동조합에 집중하여 확장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게 잡고 있어요. 1~2년은 월급을 크게 올리는 것보다는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인지 월급 오르는 것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봉사도 아니고? 라고들 하겠지만 돈의 숫자 이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기에 가능한 것 같아요. 삶의 만족도가 돈 이외의 것으로도 확장된 것 같아요.

김진희 : 저도 월급에 대한 기대치는 없어요.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급여 수준이 오르려면 조합원이 늘어야 조합비가 늘어나야 하죠. 그런데 그에 따라 많은 조합원을 관리하는 업무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월급은 조금씩 오르면

좋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돈을 덜 쓰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내 월급으로 돈으로 해결한다는 게 자본주의의 상식인데 이렇게 되면 돈이 얼마가 있어도 모자를 거예요. 자급자족에도 관심이 많아요. 지금 배우고 있는 목공도 비슷한 건데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직접 고치는 것과 같이 돈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폐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자 기반 시스템은 붕괴한다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제 성장이 강제되는, 결과적으로 붕괴될 현재의 이상한 경제 구조에서 지금 당장의 급여보다도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 : 기성세대, 기성언론의 포커스가 청년들의 7포 세대이다. ‘결혼, 출산, 연애, 대인관계, 내 집 마련, 꿈, 희망’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하는 우리들은 7포 세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적은 급여로 인해 주거, 결혼, 연애와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조한솔 : 저는 여자 친구를 8년 만났어요. 생각이 비슷해서 조만간 같이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 여자 친구가 프랑스 다녀오고 만들어온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지지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제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데 여자 친구가 도와준 경우도 있어요. 집에 대한 고민도 비슷하죠. 큰 집보다는 춘천 지역이 좋은 게 비싸지가 않아서 7천~8천만 원이면 20평 안쪽의 개인 집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에 맞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어요. 결혼비용 등은 조금 고민이 되지만 결혼이나 집에 대한 고민은 좀 적은

편이죠. 오히려 주변에서 솔로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웃음).

김진희 : 저는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아직 여러 가지로 시급하지 않아요. 월급을 모아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은 이미 포기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달팽이펀드에 돈도 넣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웃음).

임소라 : 저는 나이가 조금 있어서 사실 요즘 계속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벌어 당장은 사 먹지만 이렇게 저축을 하지 않아서 결혼 혹은 그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협동조합의 테두리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쪽(공동체)으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 경우는 달팽이집 같이 공동주거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공동육아 등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이제는 혼자 살아가기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고 혼자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것이 더 즐거운 삶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살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왔어요(웃음).

사회 : 협동조합 테두리에서 일하면서 인식 변화 같은 것들로 도움을 받은 언급을 하셨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현실에서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 것이 또 있나요? 그리고 생계라던가 자신의 삶에 있어 당면한 과제가 있나요?

임소라 : 저는 협동조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시작했어요. 주택협동조합 대한 사례를 보게 되는데 보통 부풀려진, 과장된 사례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읽고 보고 했던 것과 다르게 운영을 하게 되면서 글로 배웠던 것

이 눈으로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요즘에 관심이 있는 것은 주체성, 주인의식, 자치성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런 것들이 대단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현실에서 자구 맞닥뜨리고 있어요. 이런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한솔 : 추상적인 답일 수도 있는데 주체의식이 강화된 것은 맞아요. 계좌를 오픈하면서 구성원들이 소속감이 늘어나면서 빨리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전보다 빨리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들이 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진희 :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일단 월급을 받고 있고 먹고살 수 있는 첫 직장이고, 대출도 한 번 이용했고 경제관념 같이 돈을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데 많이 알게 되었죠.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화폐 시스템 등을 알게 되었고요. 실제 돈과 밀접하게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회: 개인적으로 미래를 위해 혹은 운영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조한솔 : 협동조합보다는 요새는 사업을 어떻게 더 만들어갈지에 대한 기업 공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희망제작소 스타트업 과정을 듣고, 지역 안에서 하는 협동조합 교육도 듣고 있어요. 협동조합과 사업의 밸런스 두 가지 안에서 맞추고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 안에서 청년들의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편인데요. 이 안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는 기획자, 어디에서는 활동가, 협동조합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그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한 순간에 잘못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다양한 장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임소라 : 일단 제가 주택공급을 하라고 할 때 모델하우스처럼 꾸미라고 하는데 인테리어를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관련 서적을 찾으며 공부했어요. 지금 사실은 주택관리사를 공부해야 하는데 잘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회의) 들어갔어요. 많은 예산이 쓸모없는 것들에 많이 쓰이는 것이 보여서 예산이 어떻게 굴러가나 살피며 협동조합에 반영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진희 : 작년 금융복지상담사를 하다가 중단한 상황이에요. 요즘에는 화폐에 대해서 금융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화폐 시스템, 이자 기반의 경제 시스템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솔 : 긴 관점에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네요(웃음)

사회 : 각박한 경제적 상황에서도 여타 활동과 노력,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진행할 계획에 있는데 이 많은 시간을 투여할 만큼의 현재의 일에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김진희 : 우선 계속 고민했던 학교를 그만두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제 삶에 있어 상당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청년 혁신활동을 통해 처음 만난 사업장이 청년

김진희(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2013년 4월 조합원 가입, 2013년 9월 상근활동 시작. 현재 청년연대은행 이장(이사장)으로 조합을 대표해 대외활동과 홍보, 안으로는 조합원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 400여 명의 조합원 조합비로 월급을 받으며, 서울에서 독립하여 살고 있다.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과 마시는 맥주 한 잔, 시적인 가사에 잔잔한 노래, 친한 친구들과 피시방에서 함께 게임하기를 즐긴다.



연대은행 토닥이였습니다. 일하기 전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단체였죠. 이곳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 다른 단체에서 일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아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돈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이 일을 계속 하면서 학교를 안 다니거나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현실로 처음 경험해본 곳이라서 의미 있는 곳입니다.

임소라 : SH공사에서 청년주택을 내고 있어 코디네이터를 같이 하고 있는데 달팽이집 공급시기와 겹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데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들,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죠. 달팽이집 같은 경우는 확실히 더 보였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친구가 밝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인데 결론적으로 모두가 좋아진 일이 되어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었죠. 단기적인 성과가 없어 지친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것이 단기간이 아닌 10년 전부터 누군가가 끌고 왔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조한솔 : 동네방네가 제 자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재밌다’는 것을 동네방네 협동조합을 하면서 처음 느꼈죠. 하루 종일 일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었고요. 2~3년은 일 생각만 계속 했어요. 심지어 여자 친구에게 계속 아이템을 말하니까 여자 친구가 화내고(웃음),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의 가졌던 꿈, 지역에서 취약 계층이 통합되는 지역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과정을 실현하는,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내가 지역 안에서 진정으로 하고

자 했던 것들을 찾았던 계기,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청년, 우리 자신에게 미래에 대한 꿈이 다들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임소라 : 지금의 현재의 기준에 맞춰서 7포, 3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기준에 맞춰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예요. 그렇게 같이 할 사람, 좋은 사람을 찾고 싶어요. 처음에는 전문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공동주거에서 대한 역할을 하다보니 10년 정도 지난 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거나 컨설팅을 하는 좋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도 생겼어요.

김진희 : 이상향 같긴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조한솔 : 예전에는 나 자신에 대한 꿈에 대해 많이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동네방네 협동조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보니 내 자신의 고민이 사라진 듯 하네요. 얼마 전 동네방네 협동조합 구성원들과 함께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우리끼리 기업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나중에는 시니어,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 안에서 노인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를 사회적경제, 기업에 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고 지금은 지역재생, 도시관광사업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20대부터 80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 협동조합 안에서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 현실,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에 위기를 안겨주는 사회구조 속에서 좌담회 참여하신 세 분과, 그리고 주위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기성세대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포기’하는 세대가 아닌 ‘극복’하는 세대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것까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중 편법론

이슈

- 클라우드펀딩법이란 무엇인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제도로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자

크라우드펀딩법이란 무엇인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이대중(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과장)

1. 들어가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발표한다. 2013년에도 세계적인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프란시스코 교황, 미얀마 아웅 산 수지 여사, 페이스북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 등 세계를 움직이는 거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활동과 행적이 소개되었다.

페리 첸, 킥스타터 CEO



출처 : 『TIME』(2013.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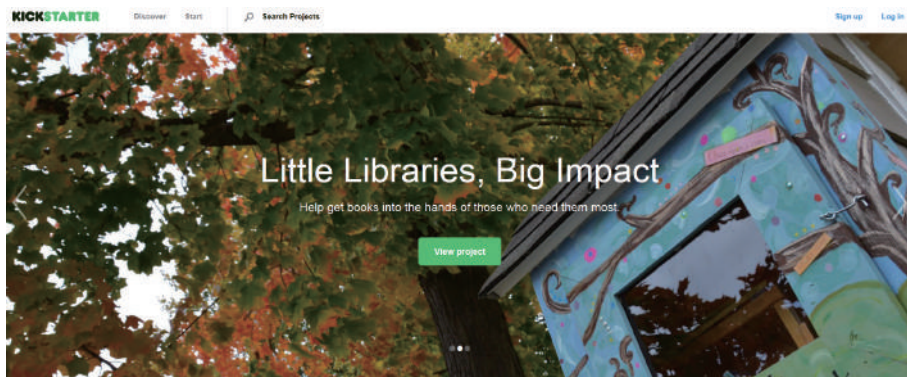
그런데 이들 중에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페리 첸(Perry Chen). 『타임』은 그를 킥스타터(Kickstarter)의 CEO로 소개한다. 어떻게 36세의 젊은 중국계 미국인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장들 사이에 포함되어 있을까? 그리고 킥스타터는 어떤 회사일까? 킥스타터는 크라우드펀딩 회사다. 즉 온라인 플랫

품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투자모금회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회사를 통해 자금을 모금하고 활용한 실적이다. 2015년 2월 13일 기준으로 킥스타터는 20만 개가 넘는 프로젝트의 자금을 모금하는 데 성공했다. 그 금액도 미화 15억 2,300만 불을 넘는다.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무려 1조 8,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스마트워치, 카드게임, 음악 서비스, 영화 제작, 비디오게임 등의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킥스타터를 만나서 투자금을 찾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성장하게 되었다. 기존의 제도 금융권이 중시하는 담보와 신용이 아닌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제시하여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일반 개개인(소액 투자자)으로부터 사업 자금 등을 조달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한 초대 인물이 바로 페리 첸 사장이다.

한국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자금 조달이라는 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왔는데, 크라우드펀딩법을 통해 어떤 시도를 할 수 있고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는 킥스타터의 기부형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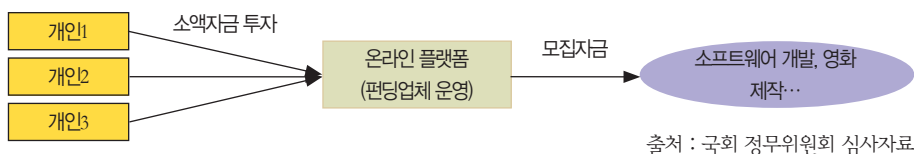
2. 크라우드펀딩이란?

(1) 크라우드펀딩의 등장

크라우드펀딩은 새로운 용어다. 최초로 용어가 등장한 기록을 찾아보니 2006년 즈음으로 추정된다. 채 10년이 되지 않는 역사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크라우드펀딩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2008년 가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다. 수많은 은행들이 넘어지게 되자 은행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자금줄을 조이고 대출 축소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신용이 없거나 부족하고 대출을 위한 담보가 없는 신생기업,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게 된다.

바로 이때 혜성처럼 등장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tool이 바로 크라우드펀딩이다. 대중이라는 ‘crowd’와 자금이라는 ‘funding’을 합친 단어의 배열처럼, 크라우드펀딩은 신용이나 담보가 아닌 수많은 대중들에게 평가와 반응을 모으고 모아서 신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것은 대단한 반향과 사회적인 임팩트를 주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회사의 실적과 규모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모았다면,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자금공급자(투자자)가 자금수요자의 일방적인 공시 내역에 대한 검토, 공개 질의 등을 통해 그 아이디어의 진정성을 가리는 이른바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리게 된 것이다.

〈그림1〉 크라우드펀딩의 자금 조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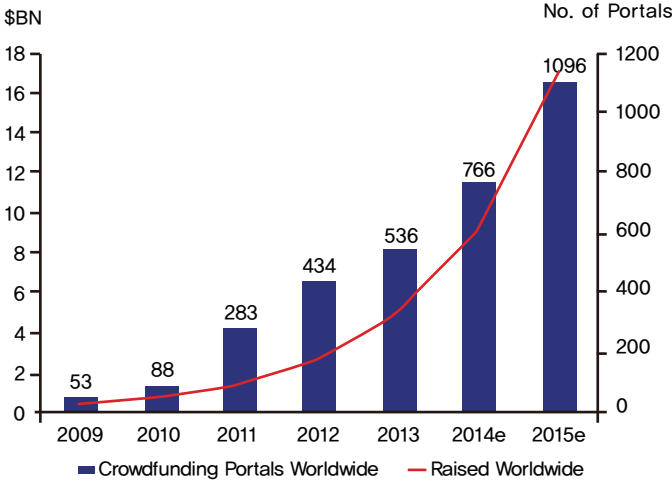


(2) 크라우드펀딩 시장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펀딩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09년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5억 3천만 달러 규모였으나, 2010년 8억 8천만 달러, 2011년 28억 3천만 달러(전년 대비 350% 증가), 2013년은 53억 6천만 달러 그리고 2015년은 1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기업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9년 50여 개에 지나지 않은 업체 수는 6년이 지난 2015년에는 1,100개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크라우드펀딩을 소개할 때 더 이상 소액, 소규모 사업체에게 투자금을 모금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림2〉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



출처 : Massolution(미국의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산업 연구기관)

(3) 크라우드펀딩 유형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금모집 방식과 투자된 자금에 대한 보상에 따라서 ① 투자형, ② 대출형, ③ 후원·기부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 신생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활용된다.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엔젤기업들의 가장 효과적인 자금 모금 방식이다. 가장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 방식이기도 한 투자형 모델은 투자가 성공한 경우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한다.

〈표1〉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유형	자금모집 방식	보상 방식	주요 사례
① 투자형	출자(지분 취득)	유상(이익 배당)	창업기업 등이 자금조달시 활용
② 대출형	대부	유상(이자 지급)	긴급자금 등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금 조달시 활용 (대부업체 중개)
③ 후원·기부형	후원금·기부금 납입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	주로 예술, 복지 분야 사업자금 조달시 활용

출처 : 금융위원회 자료

두 번째 유형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투자금에 대한 보상은 통상 일정한 이자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종의 대부업체 중개 기능과 흡사하다.

세 번째 유형은 후원 및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이다. 이는 말 그대로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이나 조건 없이 후원하고 기부하는 방식이다. 주로 복지, 공연, 예술 등 공익적인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소외계층에게 자금을 모아 서 후원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아직 국내에는 없지만, 외국에는 점차 확대되는 유형이 있다. 법률 소송형(litigation) 크라우드펀딩이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고 소비자단체의 집단소송 등의 제도가 잘 정착된 서구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소송비용을 마련하여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한다. 이 경우, 소송에서 이겨서 받은 보상금을 나누는 방식의 수익 모델

을 갖게 된다.

(4) 크라우드펀딩 해외 사례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 창의적인 혁신형 소기업 창업과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은 체계적인 법적 관심과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은 앞 다투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은 2012년 4월 일명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로 불리는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크라우드펀딩의 법적인 근거를 가장 먼저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연간 1백만 달러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해주고, 2)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3) 손해배상책임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2012년 10월 우리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금융규제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2013년부터 크라우드펀딩을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대안 채널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우리의 금융위원회에 해당하는 금융청(Financial Service Authority)은 2013년 2월 최초로 CrowdCube라는 업체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로 인가하여 합법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인 이탈리아는 2012년 10월 「창업을 위한 혁신과 성장촉진을 위한 법안(Growth Decree)」을 제정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합법화해주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각 기업은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투자액을 최대 500만 유로까지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자본시장의 역사가 길고 상당히 발달된 산업선진국에서 먼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지원과 확산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일본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2014년 5월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크라우드펀딩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보다 법 제정 준비는 늦었지만, 최종 입법은 빨리 마무리한 것이다.

(5) 크라우드펀딩 국내 여건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늦지 않은 시점인 2007년부터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금융위원회가 2012년 국내 업체를 조사한 결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모집액 규모는 74억 원 수준이었다. 2012년 세계시장 규모가 43억 불(약 4조 6천억 원)임을 감안하면, 전 세계 비중의 0.2%로 아직은 미약한 상태다.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작은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지만, 현재 크라우드펀딩을 규율하는 법령은 부재한 상태다.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투자나 대출 목적의 크라우드펀딩은 합법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미국의 JOBS법과 같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2013년 6월 신동우 의원, 2014년 4월 이종걸 의원, 2015년 3월 김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표2〉 2012년 국내 크라우드펀딩 현황

(단위: 백만 원, %, 건)

구 분		자금 모집액	금액 비중	건수
기부형		66	1	18
후원형		379	5	31
투자형		2,328	31	10
대출형	기업 대상	987	13	29
	개인 대상	3,681	49	913
	합계	4,668	62	942
총계		7,441	100	1,001

출처 : 금융위원회 자료

3. 크라우드펀딩법 주요 내용

일반인에게 법률 그리고 금융이라는 영역은 친숙하지 않은 용어다. 그렇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시장경제에서 금융은 우리 몸의 혈액과 같다. 건강한 몸에는 건강한 혈액이 흐르듯이 건강한 시장에는 건강한 금융(자금)이 흐른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과 투자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이번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칭 크라우드펀딩법의 본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자.

크라우드펀딩법의 핵심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리(제9조 제27항 신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제117조의 4 신설)

크라우드펀딩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업자에게 영업을 하도록 인정한다. 보통 금융사업자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1) 상법상 주식회사, 2) 자본금 5억 원, 3) 사업계획 건전성 입증, 4)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여 등록하면 합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요건으로 평가된다.

둘째, 자금 조달에 필요한 규제와 부담을 완화한다.

– 증권외의 모집 시 공시부담 완화(제117조의 10 제1항 및 제2항 신설)

신규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소액 자금 모집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셋째, 소액투자자의 보호제도를 마련한다.

– 투자자의 투자 한도 설정(제117조의 10 제5항 신설)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성격상 투자자 보호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금액 한도를 제한하고(개인인 경우 연간 500만 원, 동일 기업에는 200만 원 한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과하는 등 투자자보호제도를 마련했다.

넷째, 과도한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

– 손해배상책임 등(제117조의 12 신설)

수익 극대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들의 무리한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 및 자문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 평가 및 과제

그렇다면 크라우드펀딩법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개선 과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다. 바로 협동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이다.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대상의 상호부조 등의 사업이 가능하지만, 그 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칙과 방식에 있어서 협동조합기본법과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다. 먼저 한 명의 거대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다수의 개개인이 모여 힘(자금)을 모은다. 둘째, 기존의 제도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영역에서 활동한다. 셋째, 모으고 뭉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면 산을 만들기도 하고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만약 티끌을 자금으로 바꾸어 해석한다면 ‘크라우드펀딩’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미래형 협동조합 금융의 한 모습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글의 서문에서 2013년 『타임』이 선정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 100인’ 중에 젊은 크라우드펀딩 사업가 한 명이 선정되었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과 더불어 그가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을 준비하면서 얻은 가장 큰 발견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작은 깨달음이다. 그것은 크라우드펀딩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아니 사회를 바꾸는 혁신적인 발견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Q : 시장경제(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① 자본과 돈
- ②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물론 시장경제에서는 2가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망설임 없이 ①번에 체크했을 것이다. 그런데 크라우드펀딩은 앞으로 ②번을 선택해도 틀리지 않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니 앞으로는 ①번보다는 ②번이 더욱더 중요한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 않은가. [icoop](#)

제도로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자

공정경(아이쿱 시민기자)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스 철학자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정의는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철학자 존 롤즈는 『정의론』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기 위해 우선 이것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여러 대안이 그들의 특정한 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그들이 몰라야 하며 일반적인 고려 사항만을 기초로 해서 원칙들을 평가해야만 한다. (『정의론』, 195쪽)

쉽게 말하면, 내가 왕으로 태어날지 노예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노예제에 찬성할 것인가? 내가 귀족으로 태어날지 천민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신분제에 찬성할 것인가?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인종 우월제에 찬성할 것인가? 즉,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어떤 사회제도에 합의할 것인가?’라는 뜻이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987년에 전면 개정한 현재의 헌법은 1960년 3월 15일 마산 고등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마침내 부정의(不正義)한 정권을 몰락시킨 4·19혁명 정신에 그 뿌리를 둔다. 그리고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를 보자.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는 초등학생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무상으로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범위의 학생들은 무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법률 제13003호 교육기본법을 보자.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면 “교육이란 모든 학생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국가

가 민주국가로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 함께 잘사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토록 키우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위 법률과 이와 관련된 법률에 나오는 ‘교육’의 의미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뜻하는 교육이지, 단지 학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법률 제8조에 나오는 ‘의무교육’의 의미는 등록금과 교과서, 학교 시설 및 학습 재료만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이 법률에는 급식을 유상으로 해야 하는지 무상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해석의 문제이기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뿐이다. 제2조에서 말하는 교육에 의미에 밥을 빼는 게 옳은지, 밥을 넣는 게 옳은지 우리가 합의하면 된다.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이 있다

이제 학교 급식에 관한 법률인 학교급식법을 보자. 2013년 4월, 아주 훌륭한 법안이 국회에서 탄생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법안은 3년째 어두운 상자 안에서 꺼내지지도 못하고 있다. 어두운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주인공은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2012년 11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55명이 발의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 대상이 아닌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제6조(학교급식의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현행법에서 학교급식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이 개정안에는 국가가 50%, 지자체가 50%를 부담한다.

제13조(급식에 관한 경비 부담)

(…)

2.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되,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현행법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산물은 원양어업을 통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다. 지역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 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라. 원료의 가공·유통과정에서 방부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화학첨가제 등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및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변질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무상급식 정책은 2010년 6·2지방선거 공약으로 처음 서서히 떠올랐다. 당시 서울시장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각 지역 지자체장과 교육감 후보까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나라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반대로 무상급식은 정쟁화됐지만 오세훈 시장은 결국 낙선했다. 그 후 무상급식은 정쟁화를 넘어 이미 국민이 집단경험을 했고 시대정신이 었다.

하지만 2015년 3월 경남도지사가 이 시대정신을 흔들기 시작한다.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올 4월부터 경남지역 무상급식 지원금을 삭감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삭감한 예산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정책을 펼쳐 선택적 복지를 늘린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남도지사는 장애인·비정규직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 이는 커다란 위선이다.

지난달 ‘시민참여정책연구소’에서 경남 도내 18개 시·군의회 기초의원 260명을 대상으로 서민자녀지원조례와 무상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1〉 경남도내 18개 시·군 기초의원 대상 공개질의서 회신 결과

(단위 : 명)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찬반				무상급식 찬반			
총 의원 수	260	소속 정당	의원 수	총 의원 수	260	소속 정당	의원 수
조례 찬성	17	새누리	14	무상급식 찬성	105	무소속	38
		무소속	3			새정치	33
조례 반대	79	새정치	32			새누리	32
		새누리	16			노동당	2
		무소속	29	무상급식 반대	9	새누리	9
		노동당	2				
의견 유보	104	무소속	12	의견 유보	86	새누리	79
		새누리	90			무소속	6
		새정치	2			새정치	1
무답변	60	무소속	9	무답변	60	무소속	9
		새누리	51			새누리	51

※ 도내 총 기초의원 수 : 260명(새누리 171, 무소속 53명, 새정치 34명, 노동당 2명)

〈표 2〉 기초의회별 의견 취합 내역

(단위 : 명)

지역	의원 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찬반				무상급식 찬반			
		찬성	반대	의견 유보	무응답	찬성	반대	의견 유보	무응답
거제	16	0	5	6	5	5	0	6	5
거창	11	0	3	2	6	3	0	2	6
고성	11	0	1	7	3	1	0	7	3
김해	22	0	10	10	2	11	0	9	2
남해	10	2	2	5	1	4	1	4	1
밀양	13	1	2	8	2	5	0	6	2
사천	12	0	3	2	7	3	0	2	7
산청	10	0	5	5	0	5	1	4	0
양산	16	0	7	5	4	9	0	3	4
의령	10	4	2	2	2	7	1	0	2
진주	20	1	7	5	7	7	0	6	7
창녕	11	0	2	5	4	1	2	4	4
창원	43	3	19	14	7	21	3	12	7
통영	13	0	3	7	3	4	0	6	3
하동	11	0	1	6	4	3	0	4	4
함안	10	0	4	4	2	7	0	1	2
함양	10	1	1	8	0	3	0	7	0
합천	11	5	2	3	1	6	1	3	1
계	260	17	79	104	60	105	9	86	60

출처 : 시민참여정책연구소 공개센터(<http://sijungyoun.tistory.com/46>)

실질적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는 선생님은 어떨까? 경남지역 무상급식 폐지를 앞둔 3월, 경남 양산 지역의 한 학생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급식비 내면 안 돼? 내가 방과 후 수업 하나 줄일게.” 경남 산청 지역의 한 부모는 학생들끼리 이런 말이 오간다고 깊은 한숨과 눈물을 흘린다. “글쎄, 아이들끼리 ‘애는 공짜 밥 먹어요, 애는 학교를 날로 다녀요’ 이래요.” 경남지역의 한 선생님은 걱정한다. “지금은 애들이 급식 시간이면 막 뛰어가서 먹지만, 유상급식이 되면 발걸음이 무거운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부친의 한 초등학교 급식 담당 선생님은 말한다. “애들 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진1〉 지난 5월 5일 ‘놀아야 잘 크다. 2015 창원 어린이날 동네문화한마당’이 경남 창원 명성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위 사진은 그날 행사장 친환경 의무급식 부스에서 나눠 준 홍보용 풍선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정의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회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이므로 국민이 국가이다.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제1원칙이다. 먹는 문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리는 기본권 중 평등권이다. 이는 제2원칙이 아니라 제1원칙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당연히 ‘의무급식’으로 말해져야 하고,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어린이는 한 끼 밥을 걱정하면 안 된다. 이를 걱정하게 하고, 이미 합의한 일반 의지를 거스르는 정권은 부정의(不正義)한 정권이다.

한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계기로 이 땅에 정의 열풍이 불었다. 열풍이 불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사람들 가슴속에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깊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정의 열풍은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추상적 정의는 그 내용이 법과 제도로 만들어져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훌륭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제화된다면, 어느 한 정치인 또는 한 정권에 의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나의 의무, 나의 나라, 나의 법률을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제도와 법률과 정부는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일 뿐이다. 지금 내가 이 국가를 왜 좋아해야 하는 건지 큰 질문을 던진다. [icoop](#)



〈사진2〉 지난 3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남 무상급식 중단사태 경과보고 및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한 아이쿱 조합원들

내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 자신의 군주, 자신의 조국, 자신의 법률을 사랑하는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고, 또한 자신이 속한 나라, 정부, 각자 맡고 있는 직위 속에서 행복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한다면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법의 정신』, 17쪽)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을 위한 충분조건들 :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전제

신성식(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CEO)

협동조합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결합은 상호 간의 신뢰로 뒷받침된다. 한 사람이 협동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커진다면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 즉 협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사회적 신뢰가 낮은 곳에서는 개인 간의 신뢰 역시 낮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한국 협동조합들에서 두드러진 특징, 즉 조합의 형식은 남아 있는데 조합원은 사라지고, 사라진 조합원의 책임을 직원이 메우는 현상은 사회적 신뢰가 낮은 점과 유관하다. 한국의 생협은 바로 이러한 풍토에서 시작된 것이다. 생존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사회, 사회적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된 협동조합은 이런 한국 사회의 영향을 받아 왜곡되기 마련이다.

이 글은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 아래서 필자가 주목하는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편향을 언급하면서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을 위한 충분조건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의 중추를 이루게 될 협동조합 간 협동을 검토할 때 매우 중요한 기본 전제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이 글은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을 위한 충분조건을 주로 다루고 협동조합 간 협동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다시 지면을 얻게 되면 주장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면서 : 협동조합을 둘러싼 편향들

편향 1 : 성과를 도외시하는 경향

협동조합은 이기적 타산의 결합일까, 아니면 이타적 동기의 결합일까?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공동소유, 1인 1표, 민주적 운영, 정직, 공개, 호혜를 기본 가치로 삼고 있다.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와 목표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동기가 협동을 통해서 이기적 동기를 충족하면서도 성과의 이타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협동조합은 무한경쟁, 승자독식이 당연한 사회에서 정의를 되살리며 사회·경제적 약자와 연대하는 목적의식적인 공동체(intentional community)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진다.

더 나아가 협동조합의 이타적 결과는 협동조합에 어떤 편향을 불러들이기도 한다. 생명의 발전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종 결합이 진화의 동력이 된다. 그러나 종교계 일부(?)에서 진화를 인정하지 않듯이 한국 협동조합 진영의 일부도 생존을 위한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 편향이 강하게 존재한다. 이는 이기적 동기를 외면하고 이타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이기적인 동기’,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여기는 부분도 사실상 기본적인 권리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 농민이 적정 가격을 받으려는 요구나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식품, 거품이 제거된 상품을 구하려는 행동은 어찌면 아주 원초적인 권리에 기반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사실은 협동조합의 이타적 결과들은 이 기본적인 이기적 욕구를 충족한 이후에야 작동한다는 현실이다. 이타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기대한다면 자원봉사 단체나 종교에 호소하면 될 것이다.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통해서이다. 즉 사업의 결과가 좋아야 협동조합이 생존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의 협동조합, 특히 생협의 역사에서는 성과를 중시하는 면을 단순히 승자독식으로 오해하여 이를 ‘사업 편향’이라 단정하기도 한다. 승자

독식을 위한 사업의 결과와 공정한 분배가 전제된 성과는 다르다. 분배를 제대로, 공정하게 한다면 성과를 중시하는 인식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공정함은 결과의 기계적인 평등과 다르다. 협동조합은 분배의 문제에 대해 민주적이며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생협은 승자독식을 우려하기에 앞서 성과와 사업 결과를 착실하게 축적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의 효시인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의 역사는 이 점을 잘 증명한다. 협동조합의 역사에서 실패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 그다음 문제는 성과를 ‘지속시킬 방법’을 찾지 못한 점이다.

편향 2: 혁신을 이념 잣대로 폄하하는 풍토

사상, 기술, 조직 등 기성의 사회 문화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이 혁신이다. 기술혁신으로 세대마다 생활양식이 바뀌는 현대문명, 지구 생태계를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 글로벌 대기업이 초국적인 힘으로 자본의 힘을 행사하는 시대에 대중에게 자조와 자립을 위해 협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지만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

170년 전 협동조합은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게 가능하네!’를 연발하게 만들었다. 협동조합의 도전은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냈고 나아가 사회개혁에 일조했다. 하지만 2010년대의 협동조합은 대체로 대중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와 시장 환경이 변했는데 협동조합 스스로는 혁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스스로의 혁신 동력이 약화된 이유는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거나 조합원을 주인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기존의 성과에 안주해서는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은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공통된 상황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진행된 20세기 후반부터 자본기업의 혁신은 협동조합을 능가하는 반

면, 협동조합의 혁신성은 170년의 역사에 비해서 그리 도드라지지 않는다. 협동조합운동이 대중들의 선택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증명되지 않는 말들은 가설일 뿐이다.

한편, 한국의 척박한 생존 환경에서는 생협운동에 대해 과한 기대를 거는 이들도 많이 생겨났다. 협동조합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의 영역은 넓고 많지만 그 한계도 분명하다. 과한 기대만큼 편향에도 쉽게 빠져서 사업보다 이념 편향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념 편향의 풍토에서는 사업 성과를 만들려는 노력조차 폄하되었다. 자연스럽게 혁신은 멀어져갔다.

협동조합의 혁신은 기술 혁신보다 사업과 조직을 혁신하는 길을 찾아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기술혁신과 달리 사업, 조직 혁신의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지켜보고 성과가 나온 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으나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념이란 잣대를 들이대어 다양한 시도를 단정하는 풍토에서는 리스크를 감내하는 혁신이 어려워지고 성공 확률도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동이 혁신을 이기는 현상을 타파하지 않으면 혁신을 시도하는 문화와 기풍이 죽는다.

2. 조합원을 실제 주권자, 소유자로 만드는 충분조건들

자본기업과 협동조합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형식은 ‘1인 1표’의 조합원 의결권이다. 이것은 협동조합다움을 결정하는 형식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협동조합의 본질을 구현할 수 없다. 민주주의공화국에서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절로 작동되지 않듯이 조합원 1인 1표제는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일 뿐이다. 그러면 충분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협동조합의 주권자는 조합원이며 조합원이 통제한다는 본질을 실질적으로 지지하고 강화, 완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조합원 대표를 선출하고 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운

영 전반에서 조합원의 참여와 결정의 확대로서 완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담는 형식은 무엇일까?

첫째, 조합원의 결정 권한의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결정 권한과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설립 이념과 목적까지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설립 초기의 이념과 목적을 바꾼다는 것은 초기 설립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조합원의 역동성이 보장될 때 협동조합은 진정 조합원의 것이 되는 것이다. 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결정 권한을 일상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 점은 조합의 정관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쉽게 법률과 제도(형식)로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조합원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첫 번째 충분조건이다.

두 번째 충분조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원의 출자금이 커지는 ‘조합원 의무증자제도’다. 책임출자금 이상만 배당하는 ‘책임출자금제도’ 같은 형식을 도입해야 한다.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최고 권한을 가지려면 협동조합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책임은 이용, 운영, 출자에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출자, 즉 자본 투여에서 출발한다. 모든 조합원의 이용을 강제하기 어렵고, 모든 조합원이 운영에 참여하기에는 개인적 조건들이 무척 다르다. 그나마 출자에 관한 책임만은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자본은 기업의 자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빠져나갈 수 있는 자본을 자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본을 뺄 수 없게 한다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협동조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협동조합의 형식을 나라에 비유하면 국적 취득이 자유로운 국가와 비슷한 제도(형식)를 채택하고 있다. 조합원은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 점은 자연 조합원들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한다. 권한은 강하고 의무가 약한 조직은 유지하기가 힘들다.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나가는 지출이 많아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다는 형식은 국민투표를 통한 중간 평가(조합원의 탈퇴 또는 가입)로 권력의 재신임을 일상적으로 묻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다. 조합원이 탈퇴를 많이 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유효성을 의심하는 조합원이 많다는 것이다. 탈퇴 행동이 조합 권력을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작동하려면 의무 역시 강화해야 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계속된다는 것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거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는 협동조합의 유효성이 유지되거나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격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롭게 가입하는 조합원이 많다는 것은 조합원의 이익이 크다는 반증이므로 그에 비례해서 조합원의 의무와 책임을 높여가도록 동의를 구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해야 하기 때문이고, 실질적 권한 즉 조합원의 이익이 더욱 커져야 그만큼 협동조합이 잘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합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망하지 않는 협동조합들이 많다. 첫 번째 경우는 조합원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정부에 대한 의존으로 대신하는 경우다. 한국의 오래된 협동조합들이 이 경우다. 두 번째로 직원들이 조합원의 의무 이행의 부족함을 채우는 경우다. 이는 직원들이 열심히 사업한 성과로 조합원의 의무 분을 대체하는 상황인데, 일본의 많은 생협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경우의 공통적 특징은 조합원의 책임과 의무가 점차 낮아지거나 사라져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려면 지속적으로 ‘조합원의 책임’을 키워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형식은 우선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천천히 책임을 이행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책임을 키워가는 구체적 형식은 바로 출자금이다. 현재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채택하고 있는 출자금 규모는 너무 작다. 가입 출자금이 적은 것은 조합원 조직을 위해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하기도 하다. 하

지만 주인으로서의 조합원으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구체적으로 자본에 대한 책임 즉 출자금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안정한 자본인 출자금을 높여가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생협들은 부족한 자본을 채우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생산자의 외상매입금, 심지어는 이사장의 개인 가지급금(차입금)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다.

부채를 대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자금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을 내어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다. 출자금을 늘리는 일은 곧 조합원을 설득하고 신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조합원의 출자금은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분명 불안정하고 한계가 있다. 협동조합의 경영자와 직원들은 조합원 설득을 통해 출자금을 증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수익을 높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 어차피 일정한 수준의 조합원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사업적 성과와 안정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의 수익은 꼭 필요하지만 그 수익이 너무 작으면 경영은 계속 불안하고, 수익이 너무 크면 조합원이 객(客)이 되는 경향이 생긴다. 조합의 리더와 직원이 수익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 조합원과 소통, 설득하는 데 소홀해진다. 수익이 크고 충분한데 굳이 조합원 소통과 설득을 통해 출자금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조합원과 소통이 소홀해져서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해와 공감의 낮아지면 참여는 줄고, 참여가 어려워지면 결국 단순한 소비자로 머물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영자와 직원들이 지배하는 협동조합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주인으로서의 조합원이 사라진 협동조합은 유사 협동조합이 되어 등장하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작성하고 유사 협동조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협동조합의 수익은 너무 과하면 적은 것만 못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결과에 딱 마주치고 마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수익은 사업의 파산 위험을 낮추면서 조합원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한 수준이면 족하다.

협동조합의 리더는 더 큰 수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조합원과의 소통, 공감을 통해 조합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동조합이란 형식은 협동조합 리더와 조합원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통해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백성을 존경하거나 때론 두려워해야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가슴 떨림, 긴장감 없는 연애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긴장감 없는 협동조합도 성공하기 어렵다. 연애가 성공하기 위해서 쌍방의 공감은 필수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리더만이 아니라 조합원도 어느 정도는 긴장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긴장감의 근본은 불안정한 자본인 출자금에 있다.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출자금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연인 심리와 비슷해서 이 불안전성을 아예 없애려 한다면 자본기업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자본¹을 만들면 된다. 그런데 또 형식만을 강제하는 연애는 연애계약서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연인 같아서 출자금의 불안전성과는 별개로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부채를 만들지 않는 수준의 출자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출자금의 책임을 다한 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과의 구분은 꼭 필요하다.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에게서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책임 출자금’이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협동조합 관련법과 제도는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든 그렇지 않은 출자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출자금 배당을 하는 구조다. 이는 출자금 아니 더 정확하게 조합원의 책임이라는 본질적 원칙을 희석해버린다.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도 주인 대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출자금 이상의 출자금에 대해서만 출자금 배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출자금 문제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바로미터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조합원 중심으로

¹ 협동조합의 자본에 관한 연구는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근본적으로 탈퇴를 허용하지만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약속한 출자금 형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조합원의 선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되기 위한 ‘두 번째 충분조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리는 ‘조합원 의무증자제도’, 책임 출자금 이상에 대해서만 배당하는 ‘책임출자금 제도’와 같은 형식을 개발하여 충족해야 한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이용, 운영, 소유자다. 3만 원이란 적은 출자금이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는 이용이다. 휴면 조합원이란 탈퇴를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조합원이다. 조합원이지만 실제로는 조합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들에게 조합원의 책임을 키우라 기대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이용하지 않으면서 운영에 참여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충분조건은 정보 공개이다. 정보 공개는 언론 자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정직한 정보공개는 조합원이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못된 정보,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조합원 주권을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킨다. 한 사회에서 언론자유가 제한되거나 왜곡되면 사회는 퇴행한다. 협동조합에서 정보 공개가 제한되거나 왜곡되면 조합원이 사라지게 된다. 그만큼 정보 공개는 중요하다. 소비자 생협에서 제품은 조합 활동의 기본이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제대로 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요구를 반영한 물품, 그 물품의 성격이 조합의 성격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3. 맺으면서

근래 협동조합 간 협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움직임에 정부도 나서고 있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필요하며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협동조합 생태계가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다양한 생물군이 번성할 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듯 협동조합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번성한다면 새로운 시대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새로운 시대 흐름의 기저는 사람 중심의 경제다. 하지만 협동조합 자체가 그 목적을 이루는

것 못지않게 이 또한 어렵다. 따라서 많은 준비와 결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 준비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의 연구이고 상호 신뢰의 확보다. 이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충분할 때 가능하다. 협동조합이 상품과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것처럼 협동조합 간 협동도 조합원의 필요에 기초해야 하고 조합원의 지지를 얻어서 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사업체라는 성격이 변증법적으로 작동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협동과 사업이라는 이중의 융합은 온갖 편향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의 해법 찾기를 기피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만 남게 되는 경향을 키우기도 한다. 협동조합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우니 협동조합 간 협동은 말할 필요 없이 어렵다. 협동조합다움을 경시한 채 형식상 협동조합을 망라한 협동조합 간 협동은 혁신과 다양한 생태계 형성이란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채 쉽게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고 자기편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눈감게 되면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킨다.

170년간의 협동조합 역사가 가르치는 점은 분명하다. 거대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협동조합들이 기본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종내에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진정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밤하늘의 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자신의 발을 봐야 한다. 진흙탕에 빠진 발을 감추자고 하늘의 별만을 가리킬 때 협동조합 운동은 지속 가능할 수 없고 생존도 어렵기 때문이다. **icoop**

노동자협동조합 설립과 두 개의 시각 :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

송문강(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라 경쟁 상대일 뿐이다. 협동조합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시장경제 속에 움직이는 자본주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사업체일 뿐이다.”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그룹의 파고르 전자가 프랑스의 가전업체인 브란트(Brandt)를 인수합병 하는 과정에서 브란트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Workers Divided : The Fagor-Brandt Merger〉의 마지막 장면인 CEO와의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이다. 2005년 파고르 협동조합은 조합원 83%의 동의로 브란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50여 명의 브란트 노동자들을 정리하고 한다. 브란트의 노동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일반 기업에 4번씩이나 회사가 매각되는 경험을 했으며 그때마다 파업을 했다. 브란트의 노동자들은 협동조합 기업에 인수가 되면서 노동의 문제와 고용보장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일반 기업과 차이가 없는 일방적인 해고를 겪게 된다. 영화는 양측의 입장을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협동조합에서의 노동은 자본 기업에서의 노동과 과연 다른가?

최근 들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영역도 더 이상 노동문제, 인권문제 등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뉴스들이 나온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공익재단 ‘함께일하는재단’은 지난 2013년 수년간 비정규직으로 사원을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의 심리치료, 와락, 내 마음의 보고서 등으로 잘 알려진 심리치료 전문 기업 ‘마인드프리즘’이 내부 갈등으로 노사가 참여하게 대립을 하기도 했다. 어느 필자가 기고한 글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

고 경영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싫어한다. 노동조합과 의견 차이나 충돌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노동조합이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상생하는 관계일 텐데, 왜 노동조합에 대해 불신하고 이익집단으로 폄하하는 것일까?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협동조합과 노동조합과의 갈등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발생했던 문제들이다. 2004년 경상북도 구미 장천농협은 조합원 1,165명 중 84%인 983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조합원 861명의 찬성으로 장천농협 자진 해산을 결정한다. 장천농협 조합원들은 대출금리 인하, 농협 직원들의 인건비 삭감 등을 요구했으나 농협 및 노동조합 등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전국 최초로 문을 닫는 농협이 되었다. 최근 옥천농협도 노동자들이 “노조활동 보장, 성과급의 상여금 전환, 인사권 개선방안 등”을 주장하며 파업했으나, 업무가 중단되자 농민들이 농협을 해산한다. 협동조합은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라고 하지만 사람보다 자본이 우선일 수도 있는 안타까운 결정이다.

협동조합에서 노동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협동조합으로 인해 노동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설립 이전 회사의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문제되고 있다. “협동조합을 이용한 새로운 노동탄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의 사례가 신종 노동 탄압이라 할 수 있는지 그 외에 다른 쟁점은 없는지를 협동조합과 노동자의 입장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2015년 4월 말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 이사장과 조합원에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 4명을 각각 인터뷰한 후 내용을 정리하고 필자의 짧은 소견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의 설립 배경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빌딩이 있으며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존재한다.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를 보통 ‘빌딩관리, 자산관리’ 회사로 통칭한다.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은 서울역 근처에 있는 연세빌딩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12월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연세빌딩은 1993년 (구)대우건설에서 시공한 건물로 시공 후 20년 동안 건물 관리는 대우건설에서 지속해왔다. 하지만 (구)대우건설의 부도로 건물 관리는 (구)대우건설 출신으로 구성된 (주)동우공영에서 2014년까지 3년 단위의 수의계약으로 건물 관리를 했다. (주)동우공영의 전체 직원 수는 1,800여 명으로 빌딩 관리부터 건설,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규모있는 회사이다.

문제는 연세재단의 이사장이 교체되면서 (주)동우공영이 오랜 기간 수의계약으로 건물 관리를 해온 사실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발생됐다. 수의계약이 끝나는 2015년 (주)동우공영이 재입찰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중 몇 명이 재입찰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2014년 12월 말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들은 연세빌딩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재입찰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체 36명의 노동자 중 8명의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입 받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의 창립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과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 사이의 입장이 다르며 정리가 필요했다. 이에 양측을 면담한 후 내용을 정리한다.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 이사장 인터뷰



〈사진 1〉 지하 6층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 인구의 로고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이슈 등을 인터뷰하기 위해 사전 연락 후 이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빌딩의 지하에 관리회사 사무실과 기계실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최하층에서 다시 계단으로 1층을 더 내려가야 했다. 사무실은 생각과는 달리 정리 정돈이 잘되고 깨끗한 느낌이었다. 입구에 보이는 한국자산관리 협동조합 마크에서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보니 반가움과 걱정이 교차됐다. 도착해서 김 이사장을 만나 인사하고 지금의 현황 및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쉽게 하지 못할 이야기라 생각했으나 그는 의외로 무덤덤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2000년부터 동우공영에서 이 건물로 업무 배치되어 지금까지 15년이 넘게 건물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2014년 동우공영이 더 이상 건물 관리 재입찰을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가 필요했다.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 협동조합을 접하게 되었고, 협동조합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2014년 3월경부터

협동조합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상담지원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시중에 나와 있는 협동조합 관련 서적들을 읽고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할 결심을 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말 6명의 관리직 근로자들이 모여서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을 창립하고 2015년 2월 말 연세빌딩 관리 재입찰을 받게 되었다.”

협동조합 설립 이유는 명확했다. 재입찰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공부하고 설립한 것은 반가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이미 알고 있기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1993년 건물 준공과 함께 과거에는 대우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동우공영에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다. 대부분이 그때부터 일하는 노동자들이며 당연히 직원들의 단가도 높고 연차도 높았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강성 조합원들도 있다. 발주처에서는 이러한 기본 조건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이 건물 관리로 받는 수익은 동우공영으로 수입 처리된다. 하지만 비용을 모두 이 빌딩 관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미 연세재단도 알고 있던 사실이며, 재단 입장에서는 이 건물만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필요와 비용의 절감 등을 원했을 것이다.”

지금의 관리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빌딩을 잘 관리해왔다는 것은 건물의 외관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오래된 빌딩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비스의 질이나 자질 문제로 인해 건물관리업체를 바꾸려는 것은 아닌 듯했다. 김 이사장의 말처럼 직원들의 연차가 올랐을 것이고 노동조합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재단 측은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건물 관리를 유지하며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원했다.

“협동조합을 준비하면서 든 고민은 조합원의 구성이었다. 지금 연세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36명이다. 하지만 최근 재단이 승강기 관리를 기존 방식이 아닌 승강기 제조업체에 직접 외주를 주면서 해당 부문의 상주

직원이 필요 없어졌다. 이에 따라 전체 36명 중 승강기 관리직원 2명과 기계실 직원 1명을 제외한 33명의 직원들을 두고 협동조합의 조합원 구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이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어려웠으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협동조합도 사업체이다. 따라서 일이 숙달되어 있거나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 기존 직원 중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건사고가 잦은 사람이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에 함께하는 것은 부담이었다. 이들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다시 동우공영으로 복귀하면 된다. 해고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결정에 부담이 되어 현재 임금 수준의 70%를 제안하고 함께하자는 것이 최종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70% 수준의 임금을 거부했으며, 회사(동우공영)로 복귀 하지도 않았다.”

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었다. 회사가 빌딩 관리 입찰을 받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관리직은 다시 회사로 복귀하지만 일자리를 다시 배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이와 달리 현장 노동자들은 새로 입찰을 받게 되는 회사와 ‘고용 연장’에 대해 논의 하고 대부분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한다. 여기에서 협동조합의 필요성은 현장직 노동자들보다는 관리직들이 더 시급함하게 느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 포함되지 못하고 동우공영 소속으로 남게 된 노동자 8명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한 신종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문제는 앞서 언급한 파고르-브랜드 사례에서도 드러났던 문제로 ‘협동조합의 사업성’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고민이 되는 사안이었다.



〈사진 2〉 건물 1층에 전시되어 있는 과거의 모습

“수의계약 문제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괜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우선 실무적인 준비를 위해 2014년 12월 6명의 책임자 및 관리자가 우선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수의계약이 안 되면 협동조합 설립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현장직 노동자들에게는 협동조합 설립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2월이 되어서야 연세재단과 수의계약 여부가 확정되어, 이때부터 조합원 가입을 받았다. 기본 출자금은 1인당 400만 원이었으며 직급에 따라서 출자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했다.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우선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논의는 6명의 관리자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조합원과 임원 모두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 모두가 우리가 왜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단순히 근로관계에서의 노동자가 아닌 소유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해오던 방

식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협동조합도 실력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조합원도 실력이 있어야 고용이 승계될 수 있다. 모든 조합원들이 이에 동의했다. 앞으로 직무 평가와 그에 따른 차등 대우 등에 대해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논의해볼 예정이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의 소유노동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노동자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는 전통적인 노동자협동조합들도 풀기 쉬지 않은 문제였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생협평론』 17호¹에서도 다룬 바가 있다.

“대부분의 자산관리회사들이 기업의 2세대가 운영하거나 혹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빼먹는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급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된다. 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리라 확신했다. 특히 광주시 광산구 청소노동자들의 협동조합 사례를 보면서 높은 급여보다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대우와 계약 유지일 것이라 생각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된 지금 당장 직원들이 느끼는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많은 것이 변화함을 점차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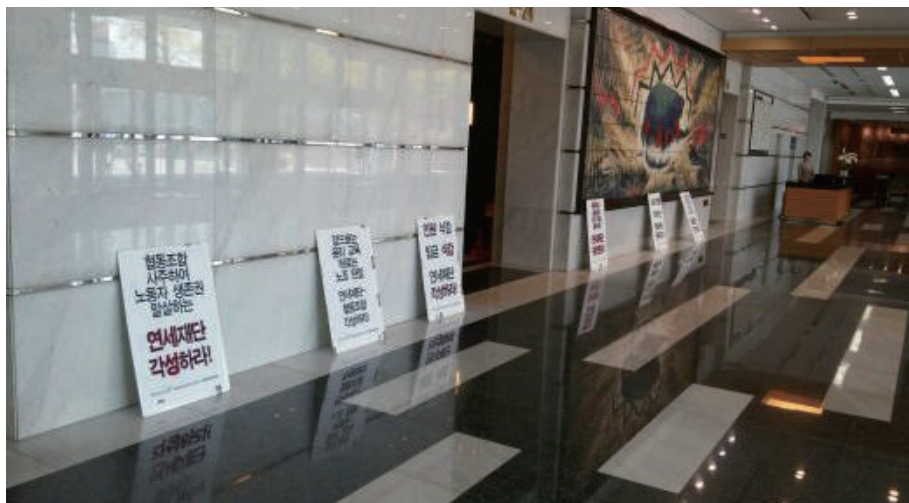
“여전히 협동조합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한 예로 현재의 조합원들은 신규 조합원이 들어와서 일을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일자리의 안정성 문제 때문). 아직 조합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다. 기존 직원들이 조합원으로서 소유노동을 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시각이 변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자신에 대해 좀 더 냉정히 평가해야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3년짜리 수의계약을 했지만 일을 잘

1 협동조합의 노동문제에 대해 “협동조합이 고용과 노동에 친화적인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자 협동조합이 왜 필요한가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고용의 안정과 인간적인 노동을 추구하는 것과 협동조합 내부에서 발생하는 조합원과의 관계문제, 노동의 질 문제, 성과 배분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듯이 노동자 스스로가 협동조합의 소유주체인 노동자 협동조합에서의 고민은 다를 수 밖에 없음을 다수의 협동조합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김대훈(2014).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생협평론 17호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협동조합의 주인으로 노력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지금보다 더 발전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교육, 협동조합의 사업성 강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노동자협동조합의 특징이 사업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의 업무를 평가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합원들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 인터뷰



〈사진 3〉 연세빌딩 1층 로비의 피켓시위 모습

김 이사장과의 대화를 마친 후 건물 1층으로 올라갔다. 지하 통로를 통해 김 이사장을 만나러 가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건물의 정문에는 노동자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건물 로비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적힌 피켓들이 놓여 있었다. 피켓 중에 “협동조합 사주하여 노동자 생존권 말살하는 연세재단 각성하라!”는 문구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3명

의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의 조직차장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 4〉 조합원에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는가? 우리는 협동조합의 장점과 좋은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은 과정에서부터 현재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처음 김 이사장에게 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신청을 받았다고 들었던 시점이 2월 26~27일이다. 그전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빌딩에서 함께 일하는 동우공영의 같은 구성원이었음에도 관리자들끼리 협동조합을 설립 하고 일방적으로 조합원 가입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입신청을 받았고 직원 중 7명에 대해서는 부당한 제안을 했다. 특히 7명 중 2명에게는 가입조차 제안하지 않았으며, 5명은 30%의 임금 삭감을 제시했다. 임금이 삭감되어 조합원에 가입된다 하더라도 이후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20년 넘게 빌딩에

서 열심히 일하면서 받는 월급으로도 생계 보장이 어려운데, 월급을 30%씩이나 삭감하고 더구나 고용도 보장하지 못한다는데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없었다.”

협동조합을 관리자들끼리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사실과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로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고, 공평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제시했다는 이들의 입장은 김 이사장의 해석과 전혀 달랐다. 또한 새로운 시사점이 있었는데 ‘설립 과정에서의 재단(원청)측 관계자 개입’ 문제였다.

“협동조합을 설립 후, 연세재단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20년 동안 빌딩에서 일한 노동자들도 동우공영이 더 이상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쟁 입찰로 공고가 나갈 것이고, 새로 입찰을 받는 기업과 고용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절차인데, 갑자기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재단은 이력과 경력도 없는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주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 연세재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정확한 증거는 없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의혹이 있었다. 연세재단이 빌딩 관리 단가를 낮추기 위해 어차피 계약하지 않을 (주)동우공영의 관리자들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 7명을 더 이상 계약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도 많지 않은 월급에서 30%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노동조합에 적극적인 노동자를 임금 삭감의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은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불필요한 노동자를 숙아내려 했고 볼 수 있었다. 결과로만 보면 지금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가입했던 조합원은 한 명도 없다.

“함께 살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은 함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직들만이 잘 살기 위한 것이다. 5년 이상 일한 말 잘 듣는 직원들만 조합원으로 받고, 노동조합에 적극적이었던 직원들을 배제하였다. 그리고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동우공

영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복귀는 쉽지 않은 문제이며, 우리 모두 10년 넘게 이곳에서 고향처럼 일했는데 떠나는 것도 쉽지 않다.”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빌딩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집회도 했지만 변화되는 것은 없다고 한다.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일터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일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지금 투쟁의 대상이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 혹은 연세재단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다.

“협동조합 설립 후 연세재단이 수의계약을 너무 쉽게 진행 했다는 사실과 경쟁 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이는 협동조합을 이용한 재단의 신종 노동조합 탄압으로 보아야 한다. 재단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를 갖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우리와 비슷하게 누군가는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또 누군가는 조합원으로 가입 받지 않고 해고했다. 우리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재단에서 협동조합을 새로운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우리의 투쟁의 대상은 재단과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 모두이다.”

같은 재단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고의적인 노동 탄압으로 의심할 만하다. 또한 ‘노동조합에 적극적인 조합원’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면 앞으로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과 같은 형태의 협동조합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할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악용되는 것은 문제이다. 노동자협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은 이사장이다. 이사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어차피 갑과 을의 관계가 존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어떠한 윤리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노동자 조합원들의 노조 설립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협동조합에도 필요하다. 조합원이 주인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최종 목적은 원직복직과 연세재단의 책임 있는 자세다. 한국 자산관리협동조합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다. 재단이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이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올바른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다양한 협동조합의 유형 중 가장 운영이 쉽지 않은 유형이 노동자협동조합이다. 전통적인 노동자협동조합에서도 다양한 노동문제가 발생했으며, 지금 이곳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과 권한은 쉽지 않은 문제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로부터 직접적인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어디에서부터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정의란 무엇인가

“당신이 전차 기관사라고 가정해봅시다. 전차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선로에 작업 중인 인부 5명이 보입니다. 당신은 전차를 멈추려고 해보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달리면 모두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욱 절망적입니다. 이때 당신의 눈에 오른쪽으로 난 비상선로가 들어옵니다. 그 비상선로에는 인부 1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핸들은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방향을 바꿔 1명을 희생시키고 5명을 살릴 수 있죠.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 ‘공리주의’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1명보다는 5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차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정의롭다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1명을 희생시킨 전차 기관사는 그 희생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느낄 수 있을까?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다른 노동자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은 어떻게 보호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이 정리 되어야 하며 법적기구가 필요하다. 만약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더라면 관리직군의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수를 위해 소수의 노동자들에게 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것 역시 윤리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해결방안을 협동조합이 아닌 좀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에서 찾고자 한다. 협동조합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재취업의 가능성이 크거나 실업 이후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보장되어 있었다면, 힘겨운 투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몬드라곤에서 노동자들의 이직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념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또는 정부의 제도와 정책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둘 다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이 친 자본 중심인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사람답게 노동하기 힘든 지금의 사회 현실은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적 장치도 미흡하다. 재단의 이유와 목적을 알면서도 제제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7천 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이중 노동자협동조합의 수는 3%를 겨우 넘는다. 필자는 협동조합의 유형 중 노동자협동조합이 가장 운영이 어렵고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협동조합이라 생각한다. 쉽게 협동조합을 하다 망하면 다시 또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의 운영이 실패하면 노동자의 개별 가정은 직접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렇기에 노동자협동조합을 생각하는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모두 공익적 목적과 방향에 따라 설립·운영된다면 좋겠지만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고, 대중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모두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동조합으로의 희망 상상에 두 개보다는 하나의 시각이 필요하다. 

아이쿱 생협만평

박해성



폐업 위기에서 함께 살길을 찾다

김은남<시사IN> 선임 기자

“조심하세요. 옷 버립니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얼른 몸을 비켰지만 때는 늦었다. 5t짜리 청소차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재활용쓰레기 봉투가 ‘퍽’ 소리와 함께 터지면서 오수가 튀었다. 쓰레기봉투를 수거 중이던 클린광산협동조합 임동현, 홍성수 조합원에게 말을 걸다 생긴 일이다.

“저런 소리를 내면서 터지는 건 대부분 아이스팩이에요. 본래 내용물이랑 포장지랑 분리수거를 해주셔야 하는데 쓰레기봉투에 함께 버리는 분들이 많네요.”

입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몸은 쉬지 않고 분주히 움직인다. 두 사람이 아파트 한 동 앞에 쌓여 있는 쓰레기봉투 20여 개를 청소차로 옮겨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분 남짓. 쓰레기를 싣고 나면 곧바로 다음 아파트 동으로 이동해야 한다. 차량들이 서행하는 아파트 단지 내부라고는 하지만 청소차 뒤에 매달려 이동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

이날 쓰레기 수거 작업을 모두 마친 것은 오후 2시 무렵.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이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 평소보다 작업 시간이 적게 걸렸다는 것이 청소차를 운전하던 김성복 클린광산협동조합 이사의 말이다. 반대로 휴일이나 명절 직후처럼 수거량이 많은 날에는 작업 시간이 배 이상 걸린단다. 일단 자신들은 회사로 돌아가 씻고 있을 테니 한 시간 뒤에 다시 만나자는 말을 듣고 비로소 필자의 옷매무새를 살펴본다. ‘이런!’ 불과 한 시간 남짓 따라다녔을 뿐인데 온몸에 쿨쿨한 냄새가 배었다. 그나마 재활용 쓰레기였기에 망정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따라다녔으면 곧바로 샤워장을 찾

아야 할 뻘했다.



〈사진 1〉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청소미화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다.

폐업 위기에서 협동조합을 떠올리다

샤워장. 그것은 클린광산협동조합의 탄생을 이해하는 데 빼놓아서는 안 될 키워드다. 때는 2012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었다. 준공영제나 톤당 단가제 계약을 통해서였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민간업체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하면서 대행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톤당 단가제는 운반거리·수거량·시간 등을 근거로 톤당 위탁대행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2010년 취임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당시까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고 있던 톤당 단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쓰레기 수거 대행회사의 운영 대부

분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준공영제에 비해 톤당 단가제를 채택하면 구정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였다.

문제는 그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청소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었다. 톤당 단가제의 경우 지자체가 대행업체의 고용 인원이나 임금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대행업체로서는 더 적은 인원에게,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킴으로써 이윤을 남기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가 톤당 단가제를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예산절감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이유다.

그런데 톤당 단가제 확대 실시가 예고된 그 무렵, D미화라는 청소 대행업체가 새로 사업을 개시했다. 기존에 광산구 청소 대행업무를 맡고 있던 업체 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던 이가 톤당 단가제 입찰을 노리고 새로 만든 회사였다. 2012년 3월, D미화에 입사한 김성복 이사는 첫날부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일단 이 회사에는 샤워실 공간이 아예 없었다. 화장실은 준 재래식이었다. 하루 종일 몸에 배인 악취를 씻지도 못한 채 귀가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청소노동자를 고용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셈이었다. 필수 장비인 장갑이나 안전화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장갑이 찢어졌다고 하면 사서 쓰라는 식이었다. “나중에 우리끼리 협동조합을 만들면서야 장갑 원가가 300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혔다”라고 김 씨는 말했다. 대부분이 기간제 계약제 신분이다 보니 휴가나 조퇴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청소업 특성상 어깨를 다치거나 골병드는 일이 있더라도 끄끙대며 자리를 지켜야 했다. 그러면서 임금은 준공영제 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2/3가 채 되지 않았다.

김 씨가 입사 두 달여 만에 떠올린 것은 노동조합이었다고 한다. 설사 노조를 만들다 해고를 당해 거리로 내쫓긴다 해도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동현, 홍성수 씨 등 마음 맞는 회사 동료들과 노조 준비모임을 만든 것이 2012년 5월. D미화에 속한 청소노동자 14명 중 9명이 준비모임에

가담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막장 인생’이라 부르곤 한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온갖 일을 전전하다 마지막으로 흘러드는 곳이 청소업체라는 자조에서다. 그런 만큼 웬만하면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않고 참고 사는 데 익숙해 있다. 그런 이들이 해고를 각오하고 나설 정도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행채 조합원은 말했다.

2012년 8월, 마침내 민주노총 산하 광주지역일반노조 D미화 지회를 정식으로 결성한 이들은 회사에 곧바로 임·단협을 요구했다. 광산구청 앞에서 매주 금요일시위도 벌였다. 초기에는 톤당 단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임·단협이 연거푸 결렬되면서부터는 청소 분야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을 구청장이 책임지라는 것으로 요구사항이 바뀌었다. 노조가 앞장서 준법투쟁도 실시했다. 근로시간 초과 시 곧바로 작업을 종료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내놓은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는 식이었다. 그러자 수거가 안 된 쓰레기가 쌓이면서 구청에 민원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골치가 아파진 구청은 노사를 어떻게든 중재시키려 나섰다. 그러나 사업주는 완강했다. 사업을 접겠다고 폐업 선언을 하더니 노조원들에게 이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위장폐업으로 맞선 것이다. 구청이 사업주에게 청소 대행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소용 없었다.

예고한 파업 날짜가 다가오고 쓰레기 대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되자 구청은 D미화와 계약을 해지하고 노조원들은 다른 업체로의 고용 승계를 보장해주겠다고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것이 2012년 11월말. 그런데 구청의 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를 벌이던 중 노조원 중 하나가 협동조합 얘기를 꺼낸 것이다. ‘조만간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게 통과된다는데 우리가 아예 협동조합 방식으로 청소 회사를 직접 차려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그 얘길 듣는 순간 다들 이견이 없었다. 회사를 옮겨도 고용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바로 이거구나’ 싶었다”라고 김

성복 이사는 말했다. 때마침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협동조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역 차원에서 협동의 경제체제를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지금도 잊지 못할 ‘일 년 같았던 한 달’

그때부터 노조원들은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광산구가 D미화에 이미 청소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인 만큼 시간이 없었다. 새 청소 대행업체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했다. 2012년 12월을 김성복 이사는 “일 년 같았던 한 달”이라고 기억한다. 남들 같으면 일 년 넘게 걸렸을 협동조합과 회사 설립 작업을 이들은 한 달 안에 마쳐야 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는 한편, 차고지와 사무실을 임대하고 청소차량을 구해야 했다. 협동조합 명칭은 광산구를 깨끗하게 가꾼다는 뜻에서 클린광산협동조합으로 정했다. 가장 중요한 청소차량은 천안에서 중고차 3대를 임대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청소차를 인수받아 천안에서 광주로 끌고 내려오는 과정은 눈물겨웠다.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이다 보니 성능이 의심스러워 고속도로에서 시속 20km로 거북이 주행을 해야 했다. “그대로 차를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였다.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없었을 것이다”라며 김성복 이사는 웃었다. 구청 또한 이들이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치른 지 일주일 만에 설립 인가를 내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클린광산협동조합이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것이 2012년 12월 28일.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전국 최초의 노동자협동조합 회사가 탄생한 것이다.

협동조합으로 새 출발을 한 뒤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김성복 이사는 말했다. 일단 노동자가 사주이자 직원인 노동자협동조합 특성상 노동자 스스로 자신들의 노동조건이나 근무환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클린광산협동조합 초대이사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인 신영훈 변호사.

경영 자문도 구할 겸 조합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그러나 웬만한 조합 현안은 이사장 없이 조합원들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해결한다. 가장 뜨거운 현안인 임금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협동조합 설립 일 년 만에 이들의 임금은 다른 톤당 단가제 업체에 비해 25% 가량 상승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직 사업 초창기인 만큼 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부담을 주기보다 퇴직적립금 등을 먼저 안정적으로 쌓아가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렇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이라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결과적으로 우세했다고 김 이사는 말한다. 민간 사업자라면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이 회사를 경영하는 목적이겠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은 더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들은 복지에도 신경을 썼다. 클린광산협동조합 차고지와 사무실은 광주공항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귀를 찢을 듯 들려오는 비행기 소음에 인터뷰가 가끔씩 중단될 정도였다. 임차료를 아끼면서 차고지 공간을 확보하려니 달리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고 조합원들은 말했다. 이렇게 열악한 곳에 등지를 틀면서도 이들은 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거금 3천여만 원을 들여 샤워시설과 휴게시설을 먼저 설치한 것이다. 장갑, 작업복, 비옷, 장화 같은 장비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아끼지 않고 지급하기로 했다. 씻지도 못하고 장비도 제때 지급받지 못했던 설움을 협동조합에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다. 덕분에 클린광산협동조합 조합원은 다른 민간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5년 초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속한 광주 지역 청소노동자 50여 명을 상대로 협동조합 수요 조사를 벌인 김성복 이사는 깜짝 놀랐다고 말한다. 이중 절반가량이 협동조합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월급 올리고 복지를 강화해도 회사 경영에 큰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깨달음이다. 물론 일반 노동자협동조합과 클

린광산협동조합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주식회사에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해피브릿지 송인창 이사에 따르면 “노동자협동조합 또한 관건은 경영 혁신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자인 동시에 경영자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런 만큼 조합원 스스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경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이는 가혹한 주문이기도 하다.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해 거꾸러지는 노동자협동조합도 적지 않다.



〈사진 2〉 광주공항에 인접해 있는 클린광산협동조합 사무실 겸 차고지

협동조합 이후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그에 비하면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편이다. 지자체와 공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일정한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데다 상품개발이나 마케팅에 따로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니다. 차량 구입비 등이 초기에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이 또한 지자체에서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보전해주는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날 일은 없다. “공공 업무를 굳이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것인지,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됐다.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던 몫을 노동자협동조합으로 돌리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김성복 이사는 반문했다. 다만 단체장이 교체되거나 했을 경우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험 부담은 있다.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정치적 특혜 시비에도 휘말린 바 있다. 구청장이 조합 설립 과정부터 적극 지원했을 뿐더러 조합 설립 이후로도 청소차 한 대를 무상 기증하는 등 자신의 치적을 위해 클린광산협동조합에 특혜성 지원을 베풀었다는 의혹이 구의회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위기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협동조합 연구자들이 노동자협동조합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의 문제다.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경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통적 기업의 직무상 위계구조와 기업 소유자로서의 노동자들의 수평적 관계 사이에 상충과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장종익(2014), 『협동조합 비즈니스 전략』). 그런가 하면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밥상에 슬쩍 손가락을 얹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도 발생한다. 협동조합 규모가 커질수록 동료 간의 밀착 관계가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이 업무에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 기울일 가능성도 커진다.

클린광산협동조합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클린광산협동조합은 태생적으로 이질성을 안고 출발했다. D미화에서 노조 결성에 이어 협동조합 설립까지 동의했던 조합원은 모두 9명. 이들 외에 D미화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 5명의 고용까지 승계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조합 설립 초기 최대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노사분쟁이 격화되던 상황에서 노조원과 비조합원 간 갈등도 상당했던 만큼 이들을 ‘품고’ 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결론은 ‘함께 가자’였다. D미화와 친인척 관계에 있던 S미화에서 해고됐던 노동자 3명까지 합류하면서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조합원 직원 17명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로 출발을 하게 됐다.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은 잘만 하면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연대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었을 뿐이다. 창업 과정에 함께 몰입했던 ‘허니문’ 기간이 끝나자 조합원 사이에 불만이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일례로 업무 분담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청소차별로 3인 1조를 이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운전기사 1명에 수거 인원 2명이 한 조를 이루는 식이다. 조합원들은 전체회의를 거쳐 이들 업무를 순환식으로 하자는 데 합의했다. 한 달 동안 운전대를 잡으면 그다음 한 달은 수거 업무를 맡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합 사무를 보고 있는 임직원이나 몸이 아픈 조합원은 일정하게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그 누구도 예외를 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결론은 후자 쪽으로 났다. 이를 두고 한 조합원은 “조직이 굴러가려면 누군가는 사장 겸 관리자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하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구조로 흘러가다 보니까 앞장서 일하던 사람들이 힘이 빠지곤 했다”라고 말했다.

근무 규율을 소홀히 여기는 조합원도 생겨났다. 무단결근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몸이 아프다고 통고하고 조퇴를 해버리는 식이었다. 말 그대로 ‘주인 없는 회사’의 허점을 악용하는 조합원들이 생겨난 것이다. 조합을 설립하고 일 년이 넘어갈 무렵, 이 문제로 조합원 전체회의가 소집되기도 했다. 그 결과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고 근태와 관련한 보고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근무 규칙을 새로 다듬었다. 지각을 3회 이상 하면 하루치 일급을 감봉하고, 무단결근을 3일 이상 하면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하는 등 패널티도 강화했다. 그러나 처음에만 이것이 반짝 지켜지는 듯했을 뿐,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양상이 나타나더라고 이행채 조합원은 말했다.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나 무임승차자로 인해 나타나는 노·노 갈등은 일반 회사의 노·사 갈등 못지않게 협동조합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처음부터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위계를 정비하고 근무 규칙을 손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

쉽다. 상황이 한 번 꼬이고 나니 바로잡기가 어려웠다”라고 김성복 이사는 말했다. 조합원 간에 충분한 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협동조합 설립을 서둘렀던 대가를 비싸게 치른 셈이다.



〈사진 3〉 클린광산협동조합 조합원들. 가운데가 김성복 이사

“우리의 선택은 그래도 협동조합”

2015년 들어 클린광산협동조합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광산구가 광주 시 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 청소 대행업체들을 흡수·통합하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문제가 됐던 민간위탁사업 방식을 정리하고, 이들 민간사업장에 속해 있던 청소노동자들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게끔 하겠다는 것이 광산구 계획이다. 청소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기간제 계약직 등으로 고용돼 있는 현재보다는 좀 더 안정된 미래와 더 나은 고용 조건이 보장되는 셈. 그럼에도 클린광산협동조합은 조합원 전체회의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에 흡수되는 대신 협동조합으로 남을 것을 결의했다. “고용주의 ‘선의’에 기대는 구조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공감대가 형성

된 결과였다. 대신 원하는 사람은 조합을 탈퇴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게끔 개별적인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끊임없이 벼적대고 때로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지라도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협동조합 구조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협동조합을 지지하고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2의 새 출발을 해보려 한다”라고 김성복 이사는 말했다. [icoop](#)

개인인가, 관계인가?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홍훈(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관계 속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오랫동안 우리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다. 근대에 들어 서양은 개인주의를 당연시하면서 인간이 타인과 무관하게 개인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왔다. 특히, 미국의 자본주의사회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학은 일관되게 인간이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고 개인이 사회의 궁극적인 단위라고 생각해왔다.

자마니(S. Zamagni)와 부르니(L. Bruni)는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Economia Civile)』에서 이에 반기를 들면서 인간에게 관계가 본질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이 경제인과 같이 개인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온 기존 경제학의 사고와 이에 근거한 시장경제를 비판한다. 그리고 시민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들에 의하면 시민경제는 같은 도시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상호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상호성은 인간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임을 말해주며, 즉각적인 대가를 기대하지 않게 해 행복한 삶을 낳는다. 또한 상호성은 효율성이나 평등성과 구분되지만 이들과 결합될 수 있다.

저자들은 중세 수도원에 존재했고 근대로 이어지는 이탈리아의 인본주의를 시민경제의 근거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18세기 중엽의 나폴리학과와 롬바르드학파가 상호부조적인 시민정신에 근거한 거래 관계를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아담 스미스와 동시대 인물인 제노베시(Antonio Genovesi)가 시민경제의 선구자이다.

시민경제에 의하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나 대부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지 않으며 그자체로 자족적이지도 않다. 시장의 경제활동이 상호성과 시민적 덕성과 결합되면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평등, 빈곤, 불행을 낳는다. 시민경제에서는 경제에 시민정신이 결합해 경제나 시민정신이 모두 개선된다.

시민경제는 경제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도 거부한다.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으로 계산되는 개인의 효용을 행복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시민경제는 시장이 그자체로 좋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이념과도 다르다. 또한 시장과 떨어져 있으면서 시장의 불완전함을 메워주는 국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나아가 시장이 그 자체로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주의와도 다르다. 결과적으로 시민경제는 경제의 배태성을 강조하는 폴라니(Karl Polanyi)에 가깝다.

이에 따라 시민경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미소금융 등의 현실적인 대안에 보다 견고한 근거를 제공한다. 흔히 협동조합 등을 시장경제와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거나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에 흡수될 일시적이거나 불안정한 생산조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경제이론은 상호성에 의존한 인간관계의 근원적인 성격을 과거의 일관된 사상 속에서 확인하면서 이

런 생각을 불식시킨다. 프랑스혁명의 구호인 자유, 평등, 형제애에 비추어 상호성을 형제애와 비슷하게 보면 시민경제는 자유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시민경제는 인간의 자유가 주는 자율성보다 인간의 상호성이 주는 행복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사회성과 사회관계의 중요성은 서양에서 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희랍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미 등장했다. 그리고 마르크스도 인간의 사회관계를 강조하면서 인간관계가 자본주의에서 상품관계에 압도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했다. 근래 들어 사회학자들은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인간관계나 연결망을 강조해왔다. 또한 최근 상당수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임을 강조한다. 개인주의는 미국의 중산층 백인 대졸자로 구성된 전 세계 인구의 5% 이하에게 적용될 뿐이다. 무엇보다 동양에는 이런 관계들이 인간 자체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상당수 경제학자들도 행복을 연구하면서 민주주의, 최소한의 일인당 소득, 환경 보존 등과 함께 인간관계가 행복을 낳는 요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아가 소득이나 소비에 있어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과의 우열에 신경을 쓰는 사회적 비교나 사회적 선호도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시민경제이론은 인간관계가 인간의 행복이나 복지에 유리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 관계를 떠나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류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끊임없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마니 등은 시장과 기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시민적인 시장과 생산조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은 상호성에 의존한 인간관계의 회복이다. 물론 이런 방법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회적이고 관계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상호성은 시민적인 것이므로 소비자 등 경제주체가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시민경제는 경제적인 개인주의가 깔고 있는 익명성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 혹은 교환관계의 물적인 성격도 거부한다. 이에 따라 시민경제는 인간의 따뜻함이 있는 거래와 교환을 주창한다. 따라서 재화도 사적 재화와 공공재 이외에 ‘관계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에서와 같이 관계재는 질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당연히 관계재를 주고받는 사회적 품질 시장은 사적인 재화의 시장과 구분된다.

시민경제이론에 의하면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적인 재화가 아니라 공공재와 관계재의 공급을 늘려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물적인 사적 재화와 달리 관계재로부터 얻는 효용이나 보람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관계재의 공급을 늘려 사람들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일은 손쉽다.

한국 경제사회는 이미 인간관계와 관계재를 중시해왔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는 선후배 관계나 갑을 관계 등 나이, 성별, 직위, 학벌, 지역 등에 따른 위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인간관계들이 집단에 묻혀 있거나 집단으로부터 파생된다. 가령, 갑과 을의 관계(선후배 관계)가 갑과 을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갑과 을이 모두 속한 집단(동창회)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계와 집단이 한국인에게 속박이 되기도 한다. 한국 경제사회는 이런 관계들을 시민적 덕성과 결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icoop](#)

청년들을 위한 협동조합의 국제적인 노력 증가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20,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퀘벡 협동조합운동

퀘벡 협동조합 진영이 지난 3월 12일에 열린 퀘벡협동조합연합회(CQCM) 정기총회에서 2020년까지 20,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 계획을 승인했다.

75주년을 맞이한 CQCM은 퀘벡 협동조합운동의 최상위 조직으로 3,000개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총 조합원 수는 880만 명, 직원은 99,000명, 매출은 CAD 340억이다. 전략 계획은 협동조합과 민주주의의 성장, 혁신 및 성과라는 공동의 비전을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형 협동조합의 지원과 중소 규모의 협동조합의 (연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CQCM은 기존/신규 협동조합이 지역정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의료, 주택, 장례 등의 분야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는 것 이외에도 퀘벡 정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자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협동조합에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이 전략 계획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퀘벡 협동조합 진영의 전략 계획인 ‘2020년을 향해서(Looking to 2020)’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20,000개의 일자리 창출/지속(이중 5,000개는 몬트리올의 일자리)이며, 이러한 목표를 통해 조합원, 지역사회 그리고 퀘벡 시민들에게 경제 및 사회적 힘을 보태고자 한다”라고 데자르탱(Desjardins) 그룹의 CEO이자 CQCM 회장인 모니크 루루(Monique Leroux)가 말했다. 퀘벡 정부는 이 전략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분야에 협동조합 진영과 협력하기 위하여 CQCM와 계속해왔던 파트너십 갱신을 고려중이다.

유럽청년협동조합인네트워크 발족

유럽 청년 협동조합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 협동조합의 연합체인 코퍼라티브유럽(Cooperatives Europe)의 이사회는 지난 2014년 11월 27일 마지막 이사회에서 유럽청년협동조합인네트워크(European Young Cooperator network) 설립을 승인했으며 지난 4월 23일 파리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총회 전달에는 유럽 청년들을 대표하여 10개국의 70여 명의 청년 협동조합들의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어 네트워크의 목표와 계획 등을 설정했다. 사회를 맡은 유럽청년포럼(European Youth Forum)의 알폰서 알리베르티(Alfonso Aliberti) 정책코디네이터는 “청년 협동조합인들은 협동조합운동을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동기와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청년협동조합인네트워크는 앞으로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청년 협동조합인들을 장려하며, 협동조합운동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들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청년협동조합인 대표를 보내 함께 협력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유럽청년협동조합인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지식과 자원의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 마련, 사회 및 환경적 책임을 협동조합운동의 사업과 활동 속에 함께 고려, 협동조합 이사회 내의 인종 및 성평등 확립, 이사회 내 청년대표 구성 비율 30% 확보, 유럽 및 국제 행사에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등을 국제협동조합운동에 요구했다.

이 네트워크는 지난 2014년 10월 퀘벡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청년 선언문’을 이행하고자 발족되었다.

※선언문 : <http://www.cicopa.coop/Cooperatives-to-transform-society.html>

청년들을 위한 금융교육 시범 프로젝트

국제협동조합연맹 아시아태평양지부(ICA-AP)의 청년위원회(ICYC)가 제 7회 정기회의의 주제를 ‘청년 협동을 위한 금융 이해’로 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네팔 카트만두(12월 7일), 부탄 팀푸(1월 11일), 인도 뉴델리(2월 4일)에서 세 미나를 개최했다.

카트만두의 세미나에는 정부 관계자, 학교, 대학생, 교수 등 약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년들의 저축 등과 관련하여 법 개정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전국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청년 주도로 설립한 금융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팀푸의 세미나에서는 청년 주도의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제7원칙 ‘지역사회에의 관여’ 실천에 대해 이야기했다. ICA-AP 지역사무총장인 발루 이에르(Balu Iyer)는 청년들의 소중한 가치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함께 1960년 부탄에서 제안한 ‘국가행복지수’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화합이 부탄의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봉사활동가그룹이 사회에 공헌하는 협동조합운동에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결의문을 작성했다.

뉴델리 세미나는 스리람상과대학(Shriram College of Commerce, SRCC)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개최되었다. 대학 내의 경제, 연극, 문학 등 다양한 학생 그룹 대표들이 캠퍼스 내 학생 그룹의 성과와 도전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ICYC의 산토스 쿠마르(Santos Kumar)는 아시아 청년 협동조합의 현황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ICYC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네팔, 부탄, 인도의 세미나에서 만들어진 권고문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ICA-AP는 계속해서 청년 협동조합과 지역의 요구에 맞는 프로젝트를 지속해나갈 것이다. **icoop**

출처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홈페이지 www.ica.
유럽노동자협동조합연합(CECOP) 홈페이지 www.cecop.

생협 평론

생협평론 과일호 목차

발간도서

생협평론 2010 겨울 (창간호)

발간사

협동조합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병호 (iCOOP협동조합연구소장)

축사

인간의 본성, 그리고 생협

정태인 (경제평론가)

열린 생협 운동의 비전제시를 기대하며

이정주 (iCOOP생협연합회 회장)

길잡이

iCOOP생협, 세상에 말 걸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창간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김형미 (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이의남 (iCOOP고양생협 이사)

창간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이슈

웅포금강에서 사라진 이름들

송기역 (르뽀작가)

투기자본이 판치는 세상, 공정무역은 위태롭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아이쿱 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지구촌 협동조합 소식

한국의 공정무역 현황

김태연 (iCOOP생협개발부 무역팀장)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 : 경제 대안 운동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iCOOP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돌발논문

우리는 속고 있다, 속는 줄도 모르고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천안함언론검증위원)

서평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이선옥 (구로생협 문화위원, 르뽀작가)

길잡이

먹을거리만 다루라고요?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영근 (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
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 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허헌중 (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쿵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신성식 (아이쿵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회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쿵 생산정책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이슈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분숙 (르브작가)

복지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해부한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조환원 활동가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정원각 ((재)아이쿵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아이쿵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돌발논문

SSM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친서민 대 친대기업으로 양분되는 보도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평

『식품주식회사』

엄은희 (부산대학교 HK교수)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아이쿵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길잡이

협동조합 공부 제대로 한 번 해 봅시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정찬율 (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장종익 (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시스템

번역: 김연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丸山茂樹 (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좌담회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이슈

3.11 농협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연구기획팀장)

건강보험 하나로운동, 참여할까, 말까?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저자)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돌발논문

에너지 위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팀장)

서평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

오귀복 (아산YMCA생협 이사)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길잡이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위해

엄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터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장원봉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김형미 (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오항식 (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회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이슈

협동의 정신과 평창 동계올림픽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생협법 개정,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된다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와
한국협동조합의 나아갈 길

홍광석 (국제협동조합연맹 분과기구담당)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르뽀

제2, 제3의 용산, 명동3구역을 말한다

유채림 (소설가/ 홍대철거현장 '두리반' 주인)

서평

『복지국가 스웨덴-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허인영 (아이쿱로생협 조합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2011 윤리적소비 공모전 수기부문 당선작

우리는 사회공헌반이다!!!

류지형 (교사)

위대한 생산

김시은 (주부)

내가 공부하는 이유

유형석 (용인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길잡이

협동조합님, 지역사회 중심이 되어 주세요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권순실 (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박제선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조병민 (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정규호 (모심과 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이쿱생협

김대훈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번역: 김연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北川太一 (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좌담회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김이창, 이진홍, 이해정, 정경섭, 김아영

이슈

중편 방송을 어찌 할까?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르뽀

강은 가르지 않고 막지 않는다

서분숙 (르뽀작가)

돌발논문

지속 가능한 사회는 행복한 노동에서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서평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차형석 (시사인 기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길잡이

지금,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말해야 한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정원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김현대 (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그 성과와 과제

번역: 김연숙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題

杉本貴志 (関西大学商学部教授)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신철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좌담회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이슈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박범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

철도민영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몇 가지 것들

박흥수 (공공운수정책연구소 연구원)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르뽀

세 가지 물음 - 정리하고 철회투쟁 1000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이야기

연정 (르뽀작가)

돌발논문

소셜미디어로 그리는 소셜디자인

고재열 (시사IN 문화팀장)

서평

『민주주의 색깔을 묻는다』

조영훈 (청년유니온 조합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2 여름 (7호)

길잡이

탐욕이 아닌 필요에서 출발하는 협동조합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 (㈜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7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24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39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2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63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76
특별기고 - 살아있는 역사: 50년 전, 영국 북서부 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로저 리차드슨 (영국 원체스터대학 명예교수)	90
Special Column - Living History: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R.C.RICHARDSON	102
좌담회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익, 조성돈, 김아영	112

이슈

동일본 대지진-원전사고 1년, 그 현장을 가다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	122
세계평화는 강경에서부터!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133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44
돌발논문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다	송명훈 (리셋 KBS뉴스 기자)	145
서평 『자본주의, 그 이후』	이창근 (쌍용자동차 해고자)	154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159

길잡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독자를 기다리며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의 만남	신효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7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 (『몬드라곤의 기적』저자)	19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김아영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31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 (아이쿱로생협 이사장)	40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연구기획팀장)	57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 (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72
좌담회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86

이슈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 -세종대 생협을 지키기 위한 싸움	문효규 (세종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102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앞두고 노동자 협동조합을 생각한다	김대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장)	113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21
-----------------	-----------	-----

르뽀

농민의 꿈	안미선 (르뽀작가)	122
-------	------------	-----

돌발논문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이계삼 (765kV 송전탑 반대故이치우열사 분신대책위 사무국장)	134
-------------	-------------------------------------	-----

서평

『협동조합, 참 좋다』	이정주 (쿵스토어 대표)	146
--------------	---------------	-----

협동조합소식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축하하며 진행된 다양한 기념행사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149
------------------------------	-------------------------	-----

생협평론 2012 겨울 (9호)

길잡이

협동조합시대, 자금 조달이라는 걸림돌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7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조혜경 ((사)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6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정원각 ((가)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28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당신협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42
좌담회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기노채, 김대훈, 민영, 조향숙, 김아영	56

이슈

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연대, '청년연대은행(준)'	조금득 (청년연대은행 추진위원장)	73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김남주 (변호사)	84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95
-----------------	-----------	----

르뽀

아직, 거기 그들이 있다	이혜정 (기록노동자)	96
---------------	-------------	----

돌발논문

구미 불산 가스 유출사태, 무엇이 문제고 얼마나 심각한가?	김수민 (구미시의회의원/ 아이쿱 구미생협 조합원)	107
-------------------------------------	-----------------------------	-----

서평

『화폐전쟁』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117
--------	-------------------	-----

협동조합소식

코퍼라티브 유나이티드 (The Co-operative United) 참가기	이주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121
--	-------------------------	-----

2012 윤리적 소비 공모전 수기부문 당선작

126

길잡이

왜 협동조합 생태계인가?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7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신성식 (아이쿱생협법인 경영대표)	20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김홍범 ((주)아이쿱축산 상무대행)	35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권미옥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52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항식 (아이쿱생협 콤피서비스 경영이사)	68
좌담회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80

이슈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몰려온다	박기용 (한겨레 사회부)	98
금융협동조합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육성하라	신철영 (아이쿱생협 클러스터추진위 집행위원장)	106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14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22
-----------------	-----------	-----

돌발논문

물의 공공성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3
------------------------	----------------------	-----

서평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	최은미 (밝맑 도서관)	133
-------------------------	--------------	-----

협동조합소식

세계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가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8
----------------------------------	----------------------------	-----

특별기고

아이쿱생협은 과연 성장신화에 빠졌나?	신철영 (아이쿱생협 클러스터 추진위 집행위원장)	141
----------------------	-------------------------------	-----

생협평론 2013 여름 (11호)

길잡이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위한 공부, 그 하나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생협법·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번역: 이향숙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7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関 英昭 (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김형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33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이재욱 (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46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53
좌담회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64

이슈

아이쿱생협, 물 사유화 저지와 공공성 회복 운동에 뛰어든다	이미연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참여활동팀)	81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전아름 (보건의료노조 선전부장)	97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09
-----------------	-----------	-----

르뽀

서부이촌동, 오세훈의 단순한 아이디어로 황폐화 된 삶의 터전	윤형중 (<한겨레> 사회부)	110
-----------------------------------	-----------------	-----

기획연재

순천언론협동조합을 가다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20
--------------	-------------------	-----

서평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130
------------------	---------------------	-----

협동조합소식

높아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위상과 평가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4
----------------------	-------------------------	-----

길잡이

협동조합, 정부 지원을 요구해야 하나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협동조합 법·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최유성 (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8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2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	34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강민수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43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김대훈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54
좌담회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완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66

이슈

못살겠다, 협동조합이다! -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기	이대희 (프레시안 협동조합팀장)	84
국정원 사태와 실종된 한국 민주주의	배성인 (한신대학교)	93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03
-----------------	-----------	-----

돌발논문

민영화의 뒷,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104
----------------------	--------------------	-----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중국집 '철가방'들이 일군 협동의 힘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18
----------------------	-------------------	-----

영화평

<위 캔 두 댓>	정설경 (생협평론 편집위원)	130
-----------	-----------------	-----

협동조합소식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의 사회적 확산을 보장하는 일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4
--------------------------------	----------------------------	-----

길잡이

협동조합의 정체성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7
--------------	--------------------	---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24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30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45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돌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 (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56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68
--------------------	----

좌담회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80
------------------------------	--------------------	----

이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과연 누구인가? -상수도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92
22조 원 퍼부은 4대강사업의 실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104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13
-----------------	-----------	-----

돌발논문

30년 후 기초연금,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의 절반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후퇴, 쟁점과 대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114
--	--------------------	-----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③

이 학교 매점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김은남 (<시새N> 선임기자)	127
-----------------------	------------------	-----

서평

현명한 소비자로는 부족하다 『질병판매학』	민영 (살림의료생협 이사장)	137
---------------------------	-----------------	-----

협동조합소식

전세계 협동조합들은 무엇을 고민하는가?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42
-----------------------	-------------------------	-----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46
--------------------	--	-----

길잡이

사람 중심의 경제를 향해서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7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17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김성기 (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29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43
좌담회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55

이슈

몬드라곤 파고르의 실패	이시즈카 히데오 (협동조합연구소 생명과 생활 주임연구원)	72
モンドラゴン、ファゴールの失敗	石塚秀雄	89
미디어 공공성 현황과 그 회복 가능성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107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15
-----------------	-----------	-----

돌발논문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이선옥 (기록노동자)	116
----------------------	-------------	-----

르뽀

밀양, 보통 사람들의 싸움을 기억하라	희정 (르뽀작가)	129
----------------------	-----------	-----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④

조합원이 주인 되는 방송, 4월1일 시작합니다	김은남 (<시새N> 선임기자)	137
---------------------------	------------------	-----

서평

『세계를 바꾼 과일의 운명: 바나나』	이웅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과정)	148
----------------------	-----------------------------------	-----

협동조합소식

사회적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렛대가 되다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51
----------------------------------	----------------------------	-----

길잡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불리는 것들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8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4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38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권 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54
좌담회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이야기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64

이슈

규제 완화라는 재앙, 그리고 의료민영화	변해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79
저성장시대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유주택의 역할	변창흠(세종대학교 교수)	88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98
-----------------	-----------	----

돌발논문

논습지의 중요성과 보전대책	주용기(전북대학교 전임연구위원)	99
----------------	-------------------	----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⑤

삶의 질 높여줄 '우리의 집'을 구상하다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16
------------------------	-------------------	-----

서평

『가치를 다시 묻다』	신미정(구로생협 조합원)	126
-------------	---------------	-----

협동조합소식

GMO 오염의 대가를 치르게 될 유기농 생산자들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0
----------------------------	------------------------	-----

길잡이

협동조합 교육, 절실한 이유	엄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문영선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8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정원각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2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금현옥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39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박주희 (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53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김아영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박사과정)	72
좌담회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82

이슈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소비자 인증시대	박인자 (아이쿱인증센터 회장)	107
‘유기농의 진실’이 놓친 진실들	김홍범 ((주)쿵스토어 광주전남 이사)	117
지하철 9호선을 협동조합으로...?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130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41
-----------------	-----------	-----

돌발논문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 그 원인과 처방은 무엇인가?	이호중 (너름 연구기획팀장)	142
--------------------------------	-----------------	-----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⑥

협동으로 함께 굶는 빵, 동네빵집 되살릴까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54
-------------------------	-------------------	-----

에세이

협동조합 역사: 로치데일협동조합을 다시 생각한다	R.C. 리처드슨 (영국 윈체스터대학)	165
Co-op History: Re-visiting the Rochdale Pioneers	R.C. Richardson (University of Winchester UK)	170

영화평

눈부신 순간에 대한 기록	주현숙 (독립영화감독)	175
---------------	--------------	-----

협동조합소식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노력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80
-----------------------------	----------------------------	-----

생협평론 2014 겨울 (17호)

길잡이

성장없이하는 모든 협동조합들에게	엄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한국협동조합의 성장통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김대훈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8
반겨야 할 역설,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윤주일 (쿠피협동조합 이사)	20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인가	강민수 (쿠피협동조합대표)	32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단상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41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역설 시각에서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A Paradox Perspective	크리스 콘포스 (Chris Conforth, 영국 Open University 교수)	53
좌담회 소비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노동의 실제	김정희, 이선경, 한금희, 손범규	71

이슈

쌀 전면개방과 식량주권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92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아서	오영중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	104

돌발논문

세월호 참사만큼 심각했던 세월호 언론보도 참사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112
---------------------------	---------------------	-----

르뽀

잊지 않겠습니다	이하늬 (미디어오늘 기자)	124
----------	----------------	-----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32
-----------	-----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⑦

서민도 이용 가능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꿈꾸다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33
-----------------------------	-------------------	-----

서평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인가?』	정원각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144
------------------	------------------------	-----

협동조합소식

협동조합의 상상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	김영미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48
----------------------------	------------------------------	-----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52

발간도서

168

길잡이

고립을 넘어 함께하는 세상을 향하여	박중현 (편집위원장)	4
---------------------	-------------	---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0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26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협동조합의 지형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 2팀)	48 61

좌담회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김정원, 유영우, 이석우, 정원오, 김형미, 김현대	75
----------------------------------	------------------------------	----

이슈

사람다움의 샘, 함께하기: 세월호, 3·11, 그리고 생협의 조합원들	김형미((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92
한·일 생협의 풀뿌리 교류의 궤적과 향후: 어려운 사회를 지지하는 중심은 '사람'에게	시바 사나에(일본협동조합학회 부회장)	103

돌발논문

갑을 관계를 넘어서려면	김찬호(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121
--------------	---------------------	-----

르포

고맙데이 사랑한데이: 농축업 이주노동자와 아름다운 농부 고용주	공정경(아이쿱 시민기자)	130
---------------------------------------	---------------	-----

아이쿱생협 만평

박해성(만화가)	141
----------	-----

기획 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⑧

오래된 여관촌을 바꿔낸 청년들의 힘	김은남(〈시사IN〉 선임기자)	142
---------------------	------------------	-----

서평

『협동조합 비즈니스 전략』	유정식(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51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주세운(동작신협 전략기획팀)	156

협동조합 소식

협동조합의 역할, 어디까지일까?	김영미(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60
-------------------	--------------------------	-----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64

발간도서

177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간도서

1. 단행본

제 목	발행년도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운다』	2015
『사람을 탐하다:협동조합 역사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탐하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인물 탐구동아리 사탐 엮음)	2015
『COOP생협 2015년 입문협동조합』(출판지원, 김창진 저)	2015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출판지원, 김창진 저)	2014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김기태, 김형미, 신명호, 장종익, 정병호 외)	2014
『잔짜 가격은 얼마인가요 2014』(E-Book)	2014
『잔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3)』(E-Book)	2013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서울특별시)	2013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조지 제이콥 홀리오크 저, 정광민 옮김)	2013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니시무라 이치로 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2013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이은선 옮김)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그물코)	2012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오리토이사와와카니시 케이코 저, 이은선 옮김)	2012
『후쿠이생협의 도전』(일본생협연합회 엮음, 이은선 옮김)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에드가 파넬 저, 염찬희 옮김)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김형미 외 저)	2012
『뒤영밭은 어떻게 나는가』(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김형미·김영미 옮김)	2011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2009 윤리적 소비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집』	2009
『생활속의 협동』(오사와 마리 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2008
『협동, 생활의 윤리』(COOP생협연대)	2008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한국생협연합회 역)	2006
『새로운 생협운동』(사)한국생협연대 엮음)	2002

2. 자료집

제 목	발행년도
『협동조합 제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의미와 사례』	2014
『제1회 아이쿱 협동조합 논문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2014
(제30회 후속교육)『아이쿱생협 생산자에게 듣다』, (제35회 포럼)『아이쿱생협 생산자 회원의 특성』	2014
(제33회 포럼 자료집)『윤리적생산을 위한 iCOOP생협 생산자들의 활동과 비전』	2014
(제34회 포럼)『2014 국제협동조합의날 기념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위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4
(GSEF 2014-iCOOP SESSION)『협동조합 제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의미와 사례』	2014
『CS자유대학 - 수강생 격언집』	2013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2년 활동 자료집』	2013
(제28회 포럼 자료집)『농지가격이 친환경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13
아이쿱생협 국제포럼((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제32회 포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2013
(제30회 포럼 자료집)『한일 생협의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발표』	2013
(2013년 시민사회포럼·한국NGO학회·(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공동기획 포럼)『윤리적 소비와 시민사회』	2013
『2013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3
(제28회 후속교육 자료집)『공정무역을 통한 인권회복 활동』	2013
(제29회 후속교육 자료집)『생활협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분석』	2013
(제29회 포럼 자료집)『iCOOP생협의 공정무역 현황과 방향』	2013
(출판기념세미나 및 제26회 포럼 자료집)『일본생협 매장사업의 실제와 시사점,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저자에게서 듣는 일본생협운동의 전망』	2012
『2011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2
(제25회 후속교육 자료집)『유럽 민중의 집과 지역 네트워크 iCOOP생협 경험연구 - 윤리적 소비와 지역생협 이사회 분석』	2012
(제26회 후속교육 자료집)『ICA 총회 및 해외 협동조합 연수 보고회』	2012
『2012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2
『제8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2
(제24회 후속교육 자료집)『2012 해외 협동조합 탐방의 열매를 나누다』	2012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포럼 자료집)『한국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2012

(제27회 포럼 자료집) 『한국 사회의 물 공공성과 식수 안전성을 생각해 보다』	2012
(제24회 포럼 자료집)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
(공동포럼)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2
(한국사회포럼 201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역할』	2011
(생협아카데미 제21차 후속교육 자료집) 『2011스웨덴, 덴마크 협동조합 – 북유럽 협동조합, 사회복지기관 방문연구 보고』	2011
(제19회 포럼) 『아이쿱생협 직원 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2011
(제20회 후속교육 자료집) 『복지국가 스웨덴에 대한 이해』	2011
(재)COOP협동조합연구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생협운동의 기원과 전개』	2011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1년 활동 자료집』	2011
『제7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1
(제23회 후속교육 자료집) 『협동조합기본법해설』	2011
(제16회 후속교육 자료집)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영국 방문 보고』	2011
(제23회 포럼) 『아이쿱생협의 새로운 생협운동 정책에 대한 평가』	2011
(제20회 포럼) 『조합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모색』	2011
(제22회 포럼) 『COOP생협 공정무역 5년의 성과와 과제』	2011
(제21회 포럼) 『조합원 활동가 교육 현황, 평가』	2011
(제14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된 생협시행령 시행규칙 내부지침에 대한 과정과 이해』	2010
(제18회 포럼) 『아이쿱생협 활동을 위한 이론 정리를 위한 토론』	2010
『아시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ICA/COOP 생협 워크숍』	2010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0년 활동 자료집』	2010
『제6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0
『2010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0
(제12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 생협법 이해』	2010
(제13회 후속교육 자료집) 『2010년 유럽영국몬드라곤 방문 보고회』	2010
(제13회 포럼) 『통화 운동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2010
(제14회 포럼) 『생협이 지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10
(제15회 포럼) 『생협에서 공제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방향』	2010
(제16회 포럼) 『2009년 iCOOP생협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 결과 보고』	2010
(제17회 포럼) 『유통인증 5년에 대한 평가』	2010
『2009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09
(우리밀 1%의 기적 10%의 희망을 위한 정책 세미나 자료집) 『생산과 소비의 상생연계를 통한 우리밀 산업화의 과제』	2009
『제5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9

(제12회 포럼 자료집) 『생협의 노동과 임금』	2009
(iCOOP생협 ICA가입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가입과 생협의 사회적책임』	2009
(제11회 포럼 자료집)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9
(제9회 후속교육 자료집) 『한국의 조세 재정 현황과 바람직한 방안』	2009
(iCOOP생활협동조합연구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윤리적소비의 방향과 실천적 모색-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지원과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중심으로』	2008
『제1회 대학(원)생 윤리적 소비 논문공모 수상집』	2008
『제4기 생협아카데미자료집』	2008
(제8회 포럼 자료집) 『스테그플레이션 위기의 한국 경제와 생협 운동의 전망』	2008
(제9회 포럼 자료집) 『광우병 촛불 정국에서 생활 운동체인 iCOOP생협과 이후 과제』	2008
(제6회 포럼)『새로운 대안운동으로써의 사회적경제와 생협운동』	2007
(제5회-포럼-자료집)『우리 밀 생산과 소비 운동의 성과와 이후 과제』	2007
『제3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7
(iCOOP협동조합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일 생협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7
(제4회 포럼 자료집)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의 사례와 향후 과제』	2007
(iCOOP생협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iCOOP생협 10년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	2007
(제6회 후속교육 자료집)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2007
(제4회 생협아카데미 후속교육 자료집)『사회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	2007
(제7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	2007
(제1회 포럼 자료집)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	2006
『제1기 생협아카데미 후속교육 자료집』	2006
『제1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6
『제2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6
(출판기념 토론회 자료집) 『생협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2006
(제10회 포럼 자료집) 『람사르총회와 논습지 보전의 필요성과 과제 전망』	2002
『한국 사회의 식문화 현황과 문제점 - 식육법의 필요에 대하여』(제2회 포럼 자료집)	2002
『생협에서 공정무역을 갖는 의미와 방향』(제3회 포럼 자료집)	

3. 연구보고서

제 목	발행년도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5-05) 『핀란드 협동조합 운동과 SOK 역사: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1』(이경수)	201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5-04)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도전에 앞서 나가기	201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5-03)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2015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2015-02) 2014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 만족도 조사	2015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 2015-01) iCOOP생협 생산자 회원의 특성-iCOOP 생산자회 정회원 조사 2014년도	201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5-2)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식품: 소비자협동조합의 시각	201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5-1)사회연대경제의 포스트 2015 개발의제 권고	201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12)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의 도전: ITSSSE 입장보고서』(이경수)	2015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11) 『협동조합과 지속가능발전: 포스트 2015 논의에 대한 기여』	2014
(기획연구과제 2014-02)『생협의 사회 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이향숙·이문희)	2014
(생활과 동향 2014-03)『밀레니엄 세대에 동기부여하기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손범규)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10) 『미국의 노동자 협동조합: 규모를 향해서2』 (이경수 역)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9) 『미국의 노동자 협동조합: 규모를 향해서1』	2014
(생활과 동향 2014-02)『일본의 유기농업 인증제도의 시사점-참가형인증시스템의 의의』	2014
(생활과동향 2014-01)『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 생각하기』 (손범규)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8) 『사회연대경제: 해방과 재생산 사이에서』 (이경수 역)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완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이경수 역)	2014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 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UK 연수보고서』	2014
(기획연구과제 2014-02)『생협의 사회 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2014-12) 『사회연대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의 도전: TFSSSE 입 장보고서』(이경수)	2014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획연구과제 2013-0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 만족도 조사』 (손범규)	2014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지민진·최은주)	2014
(연구원 리포트)『홋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이향숙)	2014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1) 『협동조합 조합원과 운동』 (이경수 역)	2014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2) 『무지개 깃발과 국제협동조합의 날 기원』 (이경 수 역)	2014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3) 『위기 동안 이탈리아 협동조합』 (이경수 역)	2014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2014-04) 『대규모 협동조합 사업체의 거버넌스(1)』 이경수 편역	2014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모음집), 『이론』 『사례』 『거버넌스』 이경수 편역	2014
(기획연구과제 2014-0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ICAFIC의 파트너십 연구』 엄은희	2014
(기획연구과제 2013-1)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장상환	2013
(기획연구과제 2013-02) 『2012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염찬희· 손범규·지민진	2013
(생활과 동향 1호)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발표』 지민진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 동향 11-2) 『소비자 협동조합 인수 시도에서 얻는 이론적, 실용 적 함의』	2013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15-1) 『노동자 회생기업 현황과 관련 연구』	2013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14-1) 『노동자 회생기업 현황과 관련 연구』	2013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코 퍼타티브 그룹 형성평가』	2013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12-1)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관여: 조합원에서 출발해 지역 사회 이익을 향해』	2013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12-2) 『이론과 실제에서의 협동조합 회사』	2013
(아이쿱해외협동조합 연구 동향 11-1) 『규모화 vs. 참여: 협동조합 딜레마?』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 동향 9-1) 『식품부문의 협동』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 동향 11-3)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역설 시각에서』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 동향 10-1) 『푸드 데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 동향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7-1) 『사회연대경제 이해하기』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9-2) 『자주관리돌봄: 협동조합접근방식』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9-3) 『지역복지·어른신복지와 생협역할 (地域福祉・高齢地域福祉と生協の役割)』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8-1) 『몬드라곤 노동자 협동조합 이해』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2013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3-2)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사례연구』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6-1) 『소비자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발전 접근법』	2012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장종익)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3) 『협동조합 녹색경제에 연료를 공급하다-캐나다 재생 에너지 분야 보고서』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2) 『ICA 세계 협동조합 모니터』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4-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조언 Tips』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3-3) 『유릭스 베네치아회의 최종보고서』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5) 『로치데일의 의미: 로치데일 선구자조합과 협동조합 원칙』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3-1)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매뉴얼』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3)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1)』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2) 『2008년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2012
(아이쿱 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2012-01-1) 『어떻게 사회적 혁신을 이룰 것인가 정책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하여』	2012
『일본 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 회계 문제』	2011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생협-의 동향』	2011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2011
『아이쿱생협의 교육 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2011
『2009 iCOOP생협 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0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20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2010
『생협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2010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2007